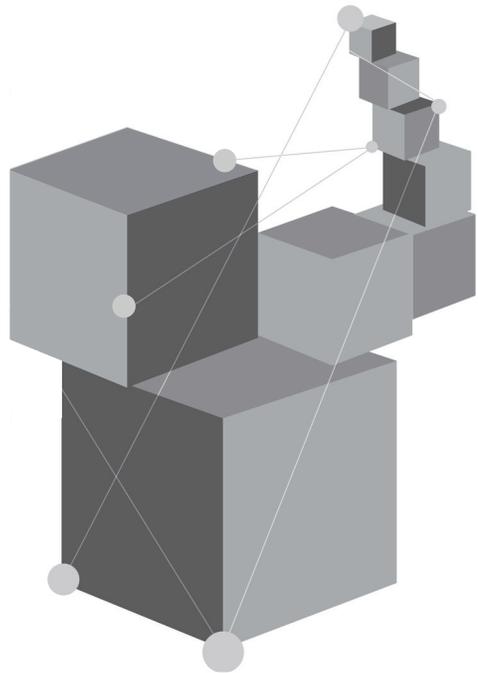


# 보도준칙



##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 2012-1054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 <주문>

東亞日報 2012년 4월 3일자 A12면 「서울시도 언론-시의원 정보수집 … 사찰? 동향파악?」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시가 시정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과 시의원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사찰로 보아야 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관(官)이 민간을 파악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과 야권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동향 파악 역시 불법사찰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주요 언론사의 인사나 취재 배경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입기자가 특정 부서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도 부서 공무원을 통해 취재 목적을 발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파급이 예상되는 내용은 대변인을 거쳐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부시장과 시장에 계도 보고된다.

서울시는 국민일보, KBS, MBC,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파업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 또 기자뿐 아니라 시의원 동향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 전반을 비판하는 시의원의 주요 발언 등을 체크해 정무라인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6월경 새로 선출될 시의회 의장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파악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부서를 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와 접촉하는 부서마다 ‘보고 들은’ 내용을 정무라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수준일 뿐 사정기관처럼 직접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대형 이슈가 된 것과 연관지어 서울시가 언론사의 인사나 취재배경, 시의원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행위도 불법사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성 기사이다. <‘관(官)이 민간을 파악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과 야권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동향 파악 역시 불법사찰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출입기자의 취재대상 중에 파급이 예상되는 내용이나 시의원의 주요 발언을 상부에 보고토록 서울시가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을 사례로 꼽았다. 언론사의 파업 동향이나 차기 시의회 의장에 누가 거론되는지를 파악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통상적 직무 관행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행위는 기사 중간에 적시된 서울시측 설명처럼 <시와 관련된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동정 수준의 사안을 파악한다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언론사 파업동향을 파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서울시 관계자는 “출입기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가본 김에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정도”라며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고 파업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사는 전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기자의 취재 내용이나 시의원의 의정발언 파악 정도를 ‘불법사찰’로 여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기사화한 것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지나친 논리비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58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2년 3월 28일자 4면 「눈뜨고 못 볼 ‘지역구 물려주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번 4월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낯선 이름과 얼굴들이 많다. ‘안철수 열풍’에 여야 모두 인적 쇄신과 개혁을 외치며 공천에 나섰던 까닭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무늬만 새 얼굴’이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고 있다. 3, 4선의 중진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내세워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 신인 박요찬 새누리당 후보는 4선의 당대표까지 지낸 안상수 의원을 물리치고 경기 의왕·과천에서 공천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인적 쇄신이라는 새누리당의 공천 방침이 극명하게 반영된 사례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 카드까지 고심했을 정도로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28일 의왕·과천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안 의원 검사 시절, 박 후보가 밑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손잡고 유세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안 의원의 박 후보 밀어주는 강했다. 안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가 있는 건물 바로 아래층에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또 선거캠프도 안 의원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동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귀띔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4·11총선을 앞두고 몇몇 전·현직 의원들이 내놓은 지역구에 이들과 혈연관계이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선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큰 제목도 <눈뜨고 못 볼 '지역구 물려주기'>라고 신랄하면서도 자극적으로 달았다.

그러나 위 기사는 제시한 사례 가운데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과천·의왕에 박요찬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것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검사시보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을 뿐이고, 공천 대상에서 빠진 안 의원 대신 공천을 받았지 안 의원에게서 지역구를 순수히 물려받은 것도 아니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안산 단원갑에 천 의원의 외사촌동생인 통합진보당 조성찬 변호사가 경선 끝에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사실도 무엇 때문에 <눈뜨고 못 볼 '지역구 물려주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추천을 받아 서울 노원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김용민 후보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보름 남짓 앞두고 나온 위 기사는 해당 후보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기자와 데스크가 사건이나 선입견을 지나치게 앞서워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항(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

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77 신문윤리강령 위반

-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문화일보 2012년 4월 18일자 1면 「‘뻔뻔한’ 박노현」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5월 14일자 25면 「‘동성애’ 펀드는 서울시」 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5월 14일자 A16면 「대법판결 앞둔 郭, 서울시 손잡고 ‘정책 대못박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 국민일보, 東亞日報는 위 적시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법판결 앞둔 郭, 서울시 손잡고 ‘정책 대못박기’

(박노현 교육감)

진보의계 담은 ‘서울교육공동선언’ 오늘 발표  
교총 등 보수측 잇달아 불참 ‘반쪽 선언’ 그칠듯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장, 허광대 서울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14일 발표하는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이 “그들의 전치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선언은 서울교육이 나갈 방향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공개 약속을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지부, 일부 구청과 교육위원회 시교육청이 진보성향 인사들과만 논의했다며 불참을 선언해 결국 반쪽짜리 선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한 장학관들과의 교섭이 오가는 등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후 시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평생교육 관련 대학의 역할’을 논의하던 중 학교혁신과 소속 A 장학관이 여성인 미래인재교육과 소속 B 장학관에게 “입 다물라,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A 장학관은 회의가 끝난 후 B 장학관의 사무실을 찾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B 장학관은 11일 평일에 일일휴가, 그의

남편은 교육청을 찾아 A 장학관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쯤 되면 다른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독재선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언의 추진 주체가 교육감 비서실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통 이런 사항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추진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과 교육감이 지을 상상해도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손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언에 대한 논의는 과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했고, 이후 박 시장이 공감하면서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언 의제는 △친환경급식 안정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희망교육 △민관협력회 제언 등 과 교육감

의 공약이자 진보성향 교육 단체들이 총선·대선 교육의제로 추진하는 것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선거 준비부터 함께했던 시민사회가 약속 이행에 공동 책임을 갖고 있었기에 공동선언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선언 계획을 비서실로부터 전해들은 민법 내부적으로 일부 담당 장학관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강남 서초 송파 중랑 중 구청 등 5개 구청과 서울교총, 보수성향의 시교육위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서울교총 이준순 회장은 “교육감 비서실 정책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공동선언을 하나 오늘 중으로 문자로 과제를 보내주면 반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

이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 각계각층이 아우러지지 않으면 그들만의 진지다. 교육감 직 상실 이후 진보 교육정책이 추진될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제는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보조 교사 배치 등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교육 정책의 관련된 문제다. 또 자치구의 창의적 체험활동-학교부적용학생 지원센터 운영 의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들 선언에 담은 건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최혜나 기자 yeh@donga.com

(문화일보)=『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징역 1년의 항소심 재판 선고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업무 수행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교육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교육계의 갈등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교육감직 사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의 사퇴 거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행정의 혼선은 짧아도 오는 7월, 길게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시민들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을 통해 “돈을 전달하면서 걱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 행위의 위법성, 부정을 저지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혹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스캔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걱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교육선진화운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1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죄인 곽노현 교육암(癌) 더 이상 안 된다’는 회견문을 통해 “이미 가야 할 때를 놓쳤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이제는 물러날 때’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곽 교육감은 100만 서울학생의 교육감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적 권위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교육감직을 즉각 사퇴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원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법리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1·2심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확률”이

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광고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시내버스 광고로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의 구청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게시판에도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해 시민단체와 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이계덕(26)씨는 지난 달 26일 무가지 메트로, 포커스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죠 동성애를 받아들여요’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이씨는 이어 지난 7일부터 서울시내 1,000대 버스에 달린 모니터에 이 같은 내용의 문자 광고를 올렸고, 앞으로 한 달간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달 25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같은 광고를 낸바 있다.

이씨는 이 같은 광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고를 하기 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 명의의 답변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시는 이런 범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씨의 게시판 활용에 대한 문의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용 게시대 활용법’과 ‘시내버스 광고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다. 이에 따라 이씨는 종로구에 게시판 이용을 신청했고, 종로구는 이씨가 요구한 ‘동성애자 차별 금지 현수막’ 광고를 2일 허가했다. 이 현수막 광고는 10일부터 종로구 관내에 걸려 있다. 이 광고는 서울 원남동 사거리 비원호텔 건너편 현수막 게시대 3번, 혜화동 4거리 돈암동 방향 가톨릭 대학 앞 현수막 게시대 4번 자리다.

7일에는 용산구도 허가했다. 영등포구는 1차 반려했으나 ‘성적 지향’이란

문구로 수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반면, 서초구청은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하는 게시물로 판단, 불허했다.

앞서 이 모씨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 출구에 균형법상에 금지된 동성애와 동성애 미팅 등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광고 게시를 시도했으나,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반려되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과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200여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13일 성명을 내 “박 시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등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국회와 법무부에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입법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대 판결을 내렸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운운하며 동성애 편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치명적인 질병과 자살률을 높이는 위험을 가진 동성애에 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거리에 게시한다는 것은 소수의 왜곡된 권리 주장만을 받아들여 결국은 동성애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내 “박 시장은 동성애 광고 허용과 안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동성애의 위험성과 실제 동성애자들이 겪는 고통,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인과 가족, 친지들이 함께 겪는 아픔에 대해 올바른 진실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사회혁신과 김태균 과장은 “인권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버스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東亞日報)=『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14일 선포하는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선언은 서울교육이 나갈 방향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공개 약속을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지부, 일부 구청과 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이 진보성향 인사들과만 논의했다며 불참을 선언해 결국 반쪽짜리 선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장학관들끼리 고성인 오가는 등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오후 시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평생교육 관련 대학의 역할'을 논의하던 중 학교혁신과 소속 A 장학관이 여성인 미래인재교육과 소속 B 장학관에게 "입 다물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A 장학관은 회의가 끝난 후 B 장학관의 사무실을 찾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B 장학관은 11일 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남편은 교육청을 찾아 A 장학관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쯤 되면 다른 의견은 듣지도 않겠다는 '독재선언'이 아니냐"고 말했다.

선언의 추진 주체가 교육감 비서실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통 이런 사안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추진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꺾 교육감이 직을 상실해도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손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언에 대한 논의는 꺾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됐고, 이후 박 시장이 공감하면서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언 의제는 △친환경급식 안정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희망교육 △민관협의회 제안 등 꺾 교육감의 공약이자 진보성향 교육 단체들이 총선·대선 교육의제로 추진하는 것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선거 준비부터 함께했던 시민사회가 약속 이행에 공동 책임을 갖고 있었기에 공동선언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선언 계획을 비서실로부터 전해들은 만큼 내부적으로 일부 담당 장학관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강남 서초 송파 중랑 중구청 등 5개 구청과 서울교총, 보수성향의 시교육의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서울교총 이준순 회장은 "교육감 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으로부터 지난주 ‘공동선언을 하니 오늘 중으로 문자로 과제를 보내주면 반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이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도 “사회 각계각층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들만의 잔치다. 교육감 직 상실 이후 진보 교육정책이 추진될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제는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보조교사 배치 등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교원 정원과 관련된 문제다. 또 자치구의 창의적 체험활동·학교부적응학생 지원센터 운영 의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을 선언에 담는 건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징역 1년의 항소심 재판 선고를 받고도 교육감 업무 수행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자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주로 전달해야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 광 교육감의 의사에 반발하는 교육관련 단체의 동향만 편향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광교육감에 대해 ‘뻔뻔한’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의 제목을 달았다.

국민일보는 동성애자 이모씨가 지난 4월 일부 무가지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죠, 동성애를 받아들여요”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부 일간지에는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지난 7일부터 서울시내 1000대 버스에 달린 모니터에 같은 내용의 문자광고를 올린 사실을 전하면서, <이씨는 이 같은 광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고를 하기 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고, 박원순 시장 명의의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서울시는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시는 이러한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서울시의 이 정도 답변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의 현행 헌법, 법과 규범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론적 수준이다.

서울시가 이같은 원론 위에서 동성애자들의 광고를 올렸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 본문에서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광고가 시내버스 광고로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제목을 통해 “동성애를 편든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에 대한 국민일보의 관점이 어떻든 간에 사실을 다루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보편적 원론에 반대하기 위해 기자나 신문사의 선입견·편견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보도기사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또 東亞日報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서울 교육 희망공동선언’을 선포할 계획임을 밝히자, 이같은 선언에 대해 반대하는 익명 취재원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기자의 주관적인 풀이를 통해 이 선언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신문은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독재선언’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취재원을 인용하지 않은 채 “대법원 판결을 앞둔 광 교육감이 직을 상실해도 공약이 추진될수 있도록 미리 손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기술하고, 제목으로 ‘정책 대못박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편향적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이 선언에 대해 다른 대부분 신문들은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을 동시에 전달했다. 가령 서울신문은 ‘광의 정책 대못박기/시와 정책방향 정립’이라는 제목아래 기사내용을 통해 반대측 의견과 찬성측 의견을 모두 게재했다.

따라서 문화일보, 국민일보, 東亞日報에 대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78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5월 10일자 4면 「생떼쓰기·사상 의심…」13개의 최루탄’ 19대 국회 걱정된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통합진보당의 부정투표와 내분이 장기화하고, 당선자들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19대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무감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 일부세력의 중북성향 등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당선자들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에 대한 걱정이 태산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진당 의원을 빗대 ‘최루탄이 13개로 늘었다’는 비명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구성에 들어갔다.

최근 통진당 이석기 당선자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독일로 망명한 좌파 지식인 송두율 교수가 지난 1980년대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며 주장한 ‘내재적 접근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위 80년대 주사파 학생들의 발언과 이 당선자의 발언은 맥을 같이한다. 이 당선자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다.

지난해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

동 의원에 대한 우려도 높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낱장으로 뜯어지지 않은 봉팅이 표가 나온 것에 대해 “풀이 살아났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 주변의 비웃음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며 표를 처리할 때 가지런하게 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붙었을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번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는 중복색채를 띤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상규 당선자는 민족민주혁명당 수도남부지역사업부 총책을 맡은 바 있고, 김재연 당선자는 과거 맥아더동상 파괴를 주도한 통일연대 대표 출신이다. 비당권파 가운데는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김제남 후보도 사상적으로는 중복주의에 가깝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밀자료와 고급자료를 요청해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통진당 의원들이 남한 내부의 고급 자료를 북한에 넘기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있었던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세부정보가 북한에 보고됐던 사건이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가 확정되면서 국회에선 각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작업이 본격화 됐다. 문제는 국회 관례상 통진당이 이번 19대 상임위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 18대 때는 자유선진당이 원내 3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바 있다. 관례대로라면 19대에서 3당으로 올라선 통진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통진당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상임위는 ‘식물 상임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원장의 의지와 다른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에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통진당 당권파들이 보이는 ‘나만 옳다’ 식의 접근법은 이같은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한편 통진당 당권파와 당선자들은 법사위에선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무위원회에선 반민주행위자 처벌법 제정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대기업 해제관련 법

안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한·미FTA 폐기와 함께 한·미동맹 폐지를 주장하고, 정보위에선 방첩기관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노조의 경영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비례대표 경선 부정 과문에 따른 당 내분 과정을 통해 도마에 오른 통합진보당 일부 총선 당선자들의 행태 및 전력과 이념적 성향 등에 비추어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우려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해설기사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무감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 일부세력의 중복성향 등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당선자들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에 대한 걱정이 태산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진당 의원을 빔대 ‘최루탄이 13개로 늘었다’는 비명도 들린다”고도 전했다.

편집자는 이 같은 기사 내용에 한 술 더 떠 큰 제목을 「생떼쓰기·사상 의심…'13개의 최루탄' 19대 국회 걱정된다」라고 신랄하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제목과 기사대로라면 통합진보당 당선자 13명 모두가 ‘요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사가 ‘중복색채’ 등과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이석기 김선동 이상규 김재연 김제남 당선자 등 5명뿐이다.

제시 사례에 대한 기술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위 기사는 심상정 노회찬 당선자를 비롯한 나머지 당선자 8명까지 왜 ‘최루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들 8명 가운데 6명은 기사가 나올 당시로는 ‘비당권파’로 분류된 당선자들로 당 내분 과정에서 ‘당권파’들이 지적받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무감각’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13명 모두를 뭉뚱그려 마치 우범자 집단이라든가 되는 양 ‘최루탄’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왜곡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기사 내용 가운데 “통진당 의원들이 남한 내부의 고급 자료를 북한에 넘기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라는 대목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간첩행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민노당 시절의 ‘일심회사 건’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위의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어 근거없는 추정에 바탕을 둔 자극적인 과잉보도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가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내외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들에게서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기자와 데스크가 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이나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그 결과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1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2년 5월 23일자 20, 21면 「‘살 빠진다’는 ‘거짓말’ 신발/SKECHERS/국내 유통시킨 ‘LS네트웍스’는?/무책임한 발뺌만」 기사와 제목, 6월 7일자 25면 「고객 망신 주고 발뺌하는 하나은행」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2건의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월 23일자〉= 『“신기만 해도 살빠진다더니 ‘뽕’이었어?”

미국 스케쳐스가 과장광고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00만달러(한화 약 581억원)의 과징금 철폐를 맞았다.

LS네트웍스가 국내 수입 판매하는 스케쳐스는 일명 ‘황정음 운동화’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FTC가 스케쳐스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 2011년 슈퍼볼 당시 스케쳐스 톱스타인 킴 카다시안을 내세워 스케쳐스 토닝화가 살을 빼주고 근육을 강화시켜 준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와 관련 FTC는 “스케쳐스의 토닝화가 일반적인 피트니스 운동화보다 살을 빼주고 근육을 강화시켜 준다는 주장이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케쳐스 토닝화를 산 소비자들은 FTC에 직접 환불을 요구하거나 집단 소송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케쳐스 측은 FTC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에 합의한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수년간 소송 등이 진행되면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혼란이 계속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FTC는 지난해 말 리복의 토닝화 이지톤에 대해서도 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TC는 당시 ‘리복의 이지톤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근육이 28% 강화되고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11% 강화된다’는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리복에 해당제품의 광고 중단과 2500만달러를 소비자에게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뒤 폭발적으로 신장했던 기능성 운동화 시장 규모는 2010년 11억 달러에서 지난해 5억달러로 위축됐다.

한편 LS네트웍스는 “미국 스케쳐스 본사에서 아직 공식 입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미국내 광고 문구가 지적을 당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모델(쉐이프업스 오리지널)은 지난 4월 이후 국내 매장에서는 ‘시즌 오프’를 이유로 철수됐다. 이후 재판매될지 여부는 미

정이다.

LS네트웍스 측은 국내 광고는 황정음이 운동하는 일상을 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큰 기대 속에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입장에선 결코 유쾌하지 않은 소식일 터. 따라서 이 같은 미국발 뉴스가 최근 급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는 스케쳐스 전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LS네트웍스는 1분기 ‘우울한’ 실적에 울상 짓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공시 내용에 따르면, LS네트웍스는 1분기 영업적자만 1억6000만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2.5% 증가한 1221억6300만원, 당기순손실은 7억6000만원으로 적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수현 김연아 등 빅스타들과 잇달아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초라한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것. LS네트웍스 관계자는 “김수현 등을 내세운 프로스펙스는 물론 다양한 라인에서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 7일자〉=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한 은행.’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이 대외적으로 선포한 경영 모토다.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은행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서 “손님 여러분의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김종준 행장의 이런 철학은 실제 고객들과 맞닥뜨리는 영업 현장에선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48)는 최근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은행이 이런 식으로 고객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이냐”며 하나은행에 분통을 터트렸다. 하나은행 측의 미숙한 일 처리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22일경 영업용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아침 일찍 집 인근의 마트를 찾았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치르려고 소지하고 있던 H카드를 내밀었으나 ‘결제불가’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크게 당황했다는 것. 그는 “순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계산대 직원 앞에서 창피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H카드 한장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낮 이씨는 하나SK카드사로부터도 “연체를 하고 있어 카드사용을 정지시키겠다”는 문자를 받고 또한번 화들짝 놀랐다. 하나SK카드 측에 내막을 알아본 결과 하나은행에 연체 중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카드들이 잇따라 정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거래하고 있던 이천의 하나은행 지점으로 문의를 했다. 그는 하나은행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결제일 변경사실을 알려드렸는데 못보셨느냐”는 답변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7년 하나은행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8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 5년간은 이자를 매월 ‘25일’에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올 3월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납부해야 했고 은행 측은 3월부터는 25일 대신 ‘12일’로 결제날짜를 변경했다. 그 사실을 3월9일 이씨에게 문자로 통보한 것이다.

이씨는 “하루에도 문자를 수십통 받는데 어떻게 일일이 문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나은행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연체여부가 걸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 자세히 안내해 주든지, 서류라도 보내는 게 은행의 도리 아니냐”고 성토했다. 휴대폰으로 필요 없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 평소 꼼꼼히 점검하지 않는다는 게 이씨의 설명. 이씨는 연체사실을 안 다음날에 은행에 필요금액을 입금한 뒤 연체상황에서 벗어났다.

하나은행 측은 ‘이씨에게 결제날짜 변경을 문자 메시지로만 알린 것은 너무 안이한 일처리 방식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문자 메시지로 알렸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태도다. 하나은행은 또 “3월18일경 이씨에게 전화로 연체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3월25일까지 은행으로 나와 결제날짜를 바꾸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강변했다.

사정이 이러니 하나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에 고객들의 불만 목소리가 큰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게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은행 등 5대 은행의 고객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 부문에서 평점 5점 만점에 3.66점을 받아 5개 은행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이씨 케이스가 하나은행의 현 주소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위 5월 23일자 기사에서 미국의 신발 브랜드인 스케쳐스가 기능성 신발인 토닝화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00만 달러를 부과받았는데도 스케쳐스 신발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LS네트웍스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LS네트웍스는 문제의 토닝화 과장 광고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광고와는 내용이 다른데다, 해당제품은 ‘시즌 오프’로 지난 4월 매장에서 철수시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취재기자는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큰 기대 속에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입장에선 결코 유쾌하지 않은 소식일 터.』라는 수준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스포츠조선은 LS네트웍스의 설명에 대해 소제목을 통해 「무책임한 발뺌만 …」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기사 뒷부분에는 본래 내용과는 동떨어지게 LS네트웍스가 1분기에 영업적자를 봤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6월 7일자 기사는 하나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40대 식당주인이 달마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날짜가 앞당겨진 사실을 몰라 연체를 하는 바람

에 곤욕을 치렀는데도 은행측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에 따르면 은행측은 납부 날짜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것이고, 식당주인은 이를 보지 못해 연체를 했고 이 때문에 거래정지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다.

기사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본문 중간에 취재기자의 질문으로 기술됐지만 『결제날짜 변경을 문자 메시지로만 알린 것은 너무 안일한 일처리 방식이 아니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은행측의 잘못은 ‘너무 안일했다’는 것이고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문자메시지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식당주인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안이 이런 정도인데도 스포츠조선은 「고객 망신 주고 발뺌하는 하나은행」이라는 큰 제목에다 「뻔뻔한 하나은행」이라는 소제목까지 덧붙여 식당주인이 겪은 사연을 톱기사로 상세히 보도했다.

하나은행의 경영 모토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김종준 회장 사진과 인사말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기사 맨 위에다 큼지막한 컷으로 싣기도 했다.

기사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위 기사와 제목은 지나치게 ‘과대포장’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포츠조선은 IS네트웍스와 하나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예단을 갖고 위 2건의 기사를 기획하고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행위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24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2년 7월 13일자 A1, A2면 「“국제학업 성취도 1위 비결은 강요된 학습 … 사교육”/郭(곽노현),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다/‘PISA’ 호주 전문위원 초청 세미나서 부정적 평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워낙 장시간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 . 전 가계가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있는 산물이 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 1등이 아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말이다. 어느 자리, 어떤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는 PISA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호주 국립교육연구원(ACER) 출신으로 PISA의 출제를 주관하는 로스 터너 전문위원을 초청했다. 그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작된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에 참가하려고 한국을 찾았다.

터너 전문위원은 곽 교육감, 황선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 앞에서 PISA의 역사와 특징을 30분 정도 설명했다. 2015년 시험부터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과제를 수행하는 ‘협업 문제해결 능력(CPS)’ 영역을 추가한다고 안내했다. PISA의 한국 시행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지민 국제학업성취도연구실장과 홍익대 박경미 교수(수학교육과)도 자리를 함께했다.

시교육청은 PISA에 대해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공식발

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한국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을 외국인 전문가 앞에서 문제 삼았다.

심성보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장(부산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이 먼저 말을 꺼냈다. “PISA 시험 때문에 애들이 생고생을 한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세금 포탈이나 도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 지적 탁월성이 도덕적 탁월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나.”

이에 대해 터너 전문위원은 “한국이 잘하는 것에 한 가지 정답은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국의 높은 점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어졌다.

“PISA 1등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없는 이유를 오바마는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분이 성적이 높은 한국의 비결을 궁금해하지만 그 8할은 강요된 누적학습, 사교육비로 뒷받침된 학습시간의 결과라는 게 현실이다.”(곽 교육감)

“PISA가 국가간 비교를 조장한 것 아닌가. (세계 1등을 차지한) 중국 상하이 학생들은 최고로 행복한 것인가. (이런 시험이) 교육 획일화를 위한 기제가 된다고 본다.”(안승문 교육감 정책특별보좌관)

터너 전문위원은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언론과 대중이 손쉽게 척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변호했다. 그는 또 “(PISA 결과를 통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변화를 위한 방향성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은 “사교육의 영향이 없을 수 없겠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현장 교사들의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해 이뤄낸 성과를 너무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교수 역시 “PISA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하므로 다른 시험과 달리 학원교육이나 선행학습과는 비교적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1면 머리에 내보낸 위 기사에서 궤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의 교육전문가 앞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한국 학생들이 매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많은 분이 성적이 높은 한국의 비결을 궁금해 하지만 그 8할은 강요된 누적학습, 사교육비로 뒷받침된 학습시간의 결과라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호주 출신으로 PISA의 출제를 주관하는 로스 터너 전문위원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초청해 PISA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나왔다. 궤 교육감은 위 기사 리드에 소개된 대로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워낙 장시간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 . 전가계가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있는 산물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1등이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마다 회원국 1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PISA 성적과 연관지은 궤 교육감의 비슷한 발언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궤 교육감은 지난 5월 외국 교육전문가들도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 “PISA에서 우리 학생들은 당당히 1위를 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숨어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58위이고, 학생들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3년 연속 꼴찌를 했다. 협동성도 36개국 가운데 35등이다. 체력도 약골이고 ...” 등 내용으로 한국교육의 현실을 비판했다.

궤 교육감이 지목한 누적학습과 사교육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이다. 위 기사 내용 중 궤 교육감과 함께 서울교육청 관계자들이 지적한 PISA의 문제점들은 교육계 일각에서 계속 문제시됐던 내용들이다.

궤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 책임자로서 외국의 교육전문가가 참석한 전문가

세미나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전문가들은 여러 명이었다. 더구나 광교육감이 『“많은 분이 성적이 높은 한국의 비결을 궁금해하지만 그 8할은 강요된 누적학습, 사교육비로 뒷받침된 학습시간의 결과라는 게 현실”』이라고 한 발언은 평가결과에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이를 두고 『...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한국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을 외국인 전문가 앞에서 문제 삼았다.』며 외국인 전문가 앞에서 문제 삼은 사실이 잘못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 『“사교육의 영향이 없을 수 없겠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현장 교사들의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해 이뤄낸 성과를 너무 폄하했다”』고 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광 교육감의 발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답이 있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기사,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사가 이 정도 내용만으로 광 교육감의 발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큰 제목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광 교육감의 발언 내용만을 부각시켜 <郭<광노현>,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다>고 표현한 것은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위 기사는 광 교육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광 교육감의 발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보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49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주문〉

한국일보 2012년 9월 7일자 14면 「인천시 ‘전임 시장 과오 들추기’ 도 넘었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악의 재정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가 이에 대한 해법 찾기 보다는 오히려 전임 시장의 ‘과오 찾기’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민선 5기 2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책자 제작에 이어 ‘인천시정 백서’ 발간을 추진하면서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의 치부를 밝히는 데 지나치게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초안이 완료될 ‘인천시정 백서’에는 서구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및 브로드웨이 조성사업 등 전임 시장으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을 재평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인천대 국립대법인 전환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전임 시장 시절 잘못된 협약 체결로 국비 지원이 늦어진 사정도 백서에 담긴다. 또한 인천아트센터 설립과 로봇랜드 부지 매립 과정에서 불거졌던 재정적 피해와 제3연륙교 미착공 문제, 월미은하레일 부실 시공, 실패한 인천세계도시축전, 자전거 도로 건설과 폐지 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도 백서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임 시장이 중앙대 검단 유치로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원금 2,000억 원 문제와 인천AG 참가국 선수·임원에 대한 호텔·항공료 무상 지원, 계양산 골프장 건설 등을 송 시장 취임 후 백지화하거나 축소했다는 성과부분이 백서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전임 시장의 치부는 찾아내 밝히고, 현 시장의 성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백서가 제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앞서 ‘2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책자를 통해 “민선 5기 출범 당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사업 대부분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였다. 국내 대기업 유치는 거의 없었고, 청년 실업은 심각한 상태였다. 땅값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해 기업체의 탈(脫) 인천은 계속됐다”고 전임 시장 시절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논란과 법적 문제를 낳고 있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현 시장의 ‘치적 쌓기’라는 지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의 내용은 인천직할시(시장 송영길)가 전임 안상수 시장의 과오 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요지다.

기사는 『전임 시장의 ‘과오 찾기’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거나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의 치부를 밝히는 데 지나치게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기자가 이렇게 서술하려면 이러한 서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실을 제시해야 하나 기사를 보면 논란이나 지적의 주체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 일부의 그 같은 논란이나 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전임 시장의 ‘과오 찾기’』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의 치부를 밝히는 데 지나치게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기사의 제목은 이같은 본문의 표현 수준을 훨씬 넘어 ‘도 넘었다’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이 기사는 기자 및 편집자의 주관적인 편견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 서술과 편집은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

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50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2년 9월 5일자 A14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좌파교육감 6명 거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놓고 좌파 교육감들이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구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의 좌파교육감들은 교과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원래 이 문제는 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교육감들은 1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공식건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서울과 전북을 비롯한 좌파교육감들의 주장에 다른 교육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고영진 협의회장(경남도교육감)은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과부 지침대로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

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좌파교육감들은 기재 거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작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좌파 교육감들은 협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기재 거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에 교육은 없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 파과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며 “교육자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이 장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고3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방침을 번복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후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는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미 기록이 끝난 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해선 기재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본문과 제목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해 교육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의 교육감들을 『좌파 교육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이 교육감들을 좌파로 기술하는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좌파’ ‘우파’란 법적 용어도 아니며 그 개념은 시대와 장소,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의 동의나 인정 따위가 없이 특정인을 지목해 이같은 호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기사에 언급된 교육감들이 스스로 ‘좌파’라고 내걸지도 않았거니와 이들 중 누가 ‘나는 좌파’라고 인정할지도 알 수 없다.

위 기사의 문맥을 보면 기사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의 개정’을 요구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임의로 ‘좌파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과 관련한 보도에서 이렇듯 억지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 건전한 논의와 합리적인 판단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을 오도하는 행태로, 신문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9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중부일보 2012년 10월 12일자 1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관통 7천600㎡ 폐구거 ‘알박기’/농어촌공, 매년 5억씩 사용료 챙겼다/공공기관이 이익 앞세워 사기업 상대 고리업자짓」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원 삼성전자 안에 있는 폐구거(溝渠·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알박기’식으로 매각하지 않고 매년 5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땅을 매각하면 경영이 악화된다는 게 땅을 매각하지 않은 이유인데, 공공기관이 회사의 이익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고리대 업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수원시 매탄동 사업장을 관통하는 7천600㎡ 크기의 폐구거 부지 위에 삼성전자 소재연구소를 짓기 위해 이

땅을 100억여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했다.

삼성 측이 매각을 요구한 땅은 삼성전자 1단지 안에 있는 원천천 변 1천 500㎡(11필지)와 삼성전자 2단지 정문 앞 6천100㎡(7필지)다.

삼성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이 땅을 1980년대 초 공장을 지을 당시부터 대부받아 사용료를 내고 있다.

삼성 측이 올해 납부한 사용료는 5억1천400만원이다.

공공부지를 빌려 쓸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이 용도를 상실했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매각하지 않고 사용료를 대폭 올려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삼성전자 1단지 1천500㎡는 2000년에 용도폐기됐고, 삼성전자 2단지도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립허가를 해줘 삼성 측은 소재연구소를 짓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구거의 용도가 상실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연간 1억~3억원 안팎의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정문 앞 땅이 매립되자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사용료로 연간 5억 원을 넘어섰다”면서 “땅 소유권을 확보해야 소재연구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 땅을 매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임대수입이 줄어서 당장은 땅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 관계자는 “삼성 측이 매각을 요구해와 본사에 문의한 결과, 현금 유동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소 2년동안은 땅을 매각하지 말라는 회신을 해왔다”고 “당장 매각하지 못하는 것은 본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원 삼성전자 안에 있는 폐구거를 삼성전자의 매각 요청에 응하지 않고 매년 5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알박기’ 식으로 매각하지 않고』 있으며 『고리대 업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는데,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말하며 고리대 업자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사 내용만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기자 및 편집자의 주관적인 편견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 서술과 편집은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96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5면 「동의대에 이어 또 이적단체 관련자를 민주화보상자로/코너에 몰리는 문재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됐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고, 이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 민주화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면

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 변호 및 민주유공자 인정과 비슷한 일이 잇따라 터지면서 문 후보가 코너에 몰린 양상이다.

문 후보가 변호를 맡았던 영남위원회 사건은 1998년 적발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공안사건으로 평가받았다. 1999년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영남위원회의 목표는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면 목표는 자주·민주·통일, 궁극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 실현에 두고 있다”고 나와 있다. 주동자였던 박경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문 후보는 박 씨 등의 재판에 변호를 맡았다. 박 씨는 현재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남위원회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석기 진보당 의원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총책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씨는 수감생활을 하던 2000년 10월, 1977년 당시 유신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대학에서 제명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다른 관련자 3명도 시위에 참여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문 후보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민주화유공자보상심의위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원으로 활동했고 박 씨 등은 문 후보가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문 후보는 4명의 영남위원회 관련자 심의 당시 세 차례는 참석했고 한 차례는 불참했다. 문 후보 측은 “회의에 참여해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앞서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역시 관련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정 당시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경찰관을 감금 중이던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건물 안에 들어갔던 경찰과 전경 7명이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등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문 후보에 대해 “반국가적이고 무책임한 후보”라며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밝히고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

한 뒤 추모비에 참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산 동의대 사건’ 가해 학생 뿐 아니라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영남위원회 사건’ 일부 관련자들이 민주화 보상자로 인정받을 때 ‘민주화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1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연결된 해설기사다.

1면 기사의 내용은 ‘새누리당 측이 확인한 민주화보상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관련자 4명이 과거 민주화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았던 별개 사안에 대한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문 후보도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던 민주화유공자보상심의위는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문후보는 여러 시국사건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 측 반응은 ‘문제될 것이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도 3면 기사는 문 후보측 설명 내용을 천착하거나 시비도 가리지 않은 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됐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고, 이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 민주화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다음 단락에서는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 변호 및 민주유공자 인정과 비슷한 일이 잇따라 터지면서 문 후보가 코너에 몰린 양상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기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고,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문 후보가 코너에 몰린 양상’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만 말미에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반대당의 주

장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편견과 예단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9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2년 11월 15일자 9면 「새누리 “100개 화살 중 하나만 맞아라” 연일 공세/”문재인, 저축은행서 70억 수입료” … 문측 “이미 해명”/야권 단일화에 대응할 ‘한 방’ 없어 네거티브에 주력」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재직 한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입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며 ‘신불자 게이트’로 규정했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 사건을 수입했을 당시 이미 소속 변호사직을 퇴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수차례 보도됐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점을 감안하면 게이트라기보다는 ‘신불자들의 돈’이란 정서적 고리를 건 네거티브 공세에 가깝다.

이날 오후엔 안대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기자실에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실무회담을 야권에 촉구하면서 “야권에 시간과 장소, 형식 등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압박했다. 당초 야권이 후보 단일화 첫 결과물인 ‘새정치 공동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날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요즘 선대위·원내 모두 7명의 대변인들과 이정현 공보단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등이 거의 날마다 등장해 의제를 던진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표지점은 모두 야권 단일화를 향한다. 야권을 향해 “화살 100발을 쏘서 그중 한 개가 맞으면 맞는 것”(선대위 관계자)이라며 ‘난사’하는 상황이다.

크게 보면 신경전식 공세와 정책 전략으로 나뉜다. 지난 12일 이정현 공보단장이 야권의 공동정부론·책임총리제 등이 선거법상 ‘사후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신경전의 대표적 예다. 권영세 상황실장이 12일 “(단일화 논의 이후)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보도 분량을 분석했더니 박근혜 후보 분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불균형을 지적한 것도 같은 전략이다. 단일화로만 쏘리는 시선을 언론 보도 단계부터 고삐를 죄어보겠다는 의도다.

반면 박 후보를 경제위기론에 대응해 ‘준비된 대통령’으로 매김하는 구호가 등장하고, 대선의 정치적 파트너로 ‘호남 총리’ 문제를 거론하거나, 수도권 30·40대를 겨냥한 획기적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 등의 접근은 포지티브 전략이다.

이런 ‘100개 화살 전략’ 이면엔 야권 단일화에 대응할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집중할 의제는 없고, 이것저것 던져보는 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주도권을 뺏겼으니 누가 후보가 되고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4일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이런 기대가 실제화하기를 기대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야권 두 후보가 서로 정책을 놓고 대결하고 감동을 줬다면 우리에게 크게 위협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 (우리로서) 안심”이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가 위 기사 보도 하루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하지만 회견 내용은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입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며 ‘신불자 게이트’로 규정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 수입료를 받은 경위 등에 대한 김 본부장의 주장을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다. 기사만으로는 무엇 때문에 문 후보를 공격했고, 왜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기사는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 사건을 수입했을 당시 이미 소속 변호사직을 퇴임한 상태”라는 문 후보 선대위 박광운 대변인의 반박 내용과 더불어 『이미 수차례 보도됐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점을 감안하면 게이트라기보다는 ‘신불자들의 돈’이란 정서적 고리를 건 네거티브 공세에 가깝다.』는 주관적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새누리 “100개 화살 중 하나만 맞아라” 연일 공세」라고 큰 제목을 다는 등 김 본부장의 주장을 ‘100개 화살’ 가운데 하나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정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무엇을, 왜 주장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전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후 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순서다.

따라서 위 기사는 기자나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의심 살 소지가 크고 기사 작성 및 편집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99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2년 11월 10일자 A17면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 강행 ... 933개 초중고 급식 중단/빵으로 끼니 ... “애들 상대로 해도 너무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시락을 싸느라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야 했어요. 한번이라면 모르겠지만 급식 중단이 계속될까봐 걱정되네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장민경 씨(42)는 9일 파업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하루야 괜찮다지만 도시락을 계속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서다.

장씨의 아이가 다니는 서울 도곡초등학교는 이날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이 생긴 서울의 학교 7곳 중 한 곳이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다른 학부모들 표정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기자가 찾은 서울 도곡초교 교실에서도 어색한 광경이 펼쳐졌다.

2학년 1반 교실에선 학생 25명이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4명은 학교에서 나눠준 김밥과 두유, 빵을 먹고 있었다. 이 학교는 7일 가정통신문을 보내 도시락 준비를 요청했다.

배지은 담임교사는 “파업이 계속되면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 아이들이 불편을 겪을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당장 이날부터 아이들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날 도곡초교에서 총 19명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두유, 또 학부모가 보내온 김밥으로 허기는 채울 수 있었으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학교 4학년 3반 담임인 정진옥 교사(47)는 “도시락 준비 여부로 부모님들이 신경써 주는 차이가 도드라지게 된다”며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무척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총 5명의 급식조리원이 일하는 도곡초교의 경우 4명이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소속돼 있다.

이날 노조원 1명을 포함해 2명의 조리원이 출근했지만 급식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장 걱정은 추가 파업할 경우 학교 측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옥선 도곡초교 교장은 “노동법상 문제가 없도록 학교 인력 중에서 급식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찾고 있다”며 “당장 급식이야 어떻게든 한다지만 학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는 도곡초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파업으로 전국 공립 초·중·고교 9647곳 중 10%가량인 933개 학교가 급식 중단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나마 서울에선 7개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 등이 더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150개 학교 급식이 중단됐으며 부산(63)·광주(108)·전남(147) 대구(61) 경북(25) 등에서도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업을 진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호봉제 전환과 단체협상 등을 요구하며 9일 하루 총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가 파업에도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전국 11개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학부모시민단체협의회는 “어린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파업을 전개해선 안 된다”며 “노동쟁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가장 비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파업이 재발한다면 단위학교별 학부모회를 통한 도시락 공동구매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지난 11월 9일 하루 동안 펼쳐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일선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표정과 움직임, 교육계 반응 등을 두루 묶어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파업을 비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큰 제목도 「빵으로 끼니 … “애들 상대로 해도 너무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외면하다시피했다. 기사 뒷부분에 있는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호봉제 전환과 단체협상등을 요구하며 9일 하루 총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가 파업에도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한 문장이 전부다. 기사만 놓고 보면 이들이 왜 파업을 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다른 상당수 언론매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와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아 10년 넘게 일해도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월급이 100여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요구사항,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의 주장을 함께 전했다.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가 예정된 파업에 대비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예단이나 편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0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1월 6일자 11면 「젊은 날의 추억(?) … 폭주족 된 교수님」 제목과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인 A(49) 씨. 그는 젊었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A씨는 4년 전 고급오토바이인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 중고를 약 3000만원에 구매했다. 이 오토바이는 출력과 소리를 높이기 위해 순정 머플러(소음기)가 빠진 것이었다. 큰 소음을 내는 속칭 ‘파이프 머플러’로 개조된 것으로, 기차가 최대 속도로 달릴 때 내는 것보다 더 큰 소음이 난다. A씨는 최근 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에 사는 목사 B(46) 씨도 수년 전 할리데이비슨을 중고로 구매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역시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폭주족이 점차 고학력층을 위주로 고령화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50일간 불법 구조 변경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학교수, 목사, 공무원 등 223명(40대 이상)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에도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대학교수, 교사, 자영업자 등 오토바이 소유주 42명이 단속에 걸렸다. 폭주족이 고령화되는 것은 젊은 시절의 폭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어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나이가 많은 폭주족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학력층이 폭주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역시 고급 오토바이는 고막을 두드리는 엔진 굉음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

다. 이번 단속에 걸린 일부 40대 라이더들은 “대형오토바이는 소리가 커야 품위가 난다는 생각에 별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로 살 때 소리가 유난히 컸지만 할리데이비슨이라 원래 소리가 큰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할리데이비슨 공식 동호회 ‘HOG 코리아’ 관계자는 “중고로 살 때 이미 불법 구조 변경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 고급오토바이 10대 중 8대가 순정 머플러가 없다. 순정 머플러를 사려고 해도 국내에는 파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동호회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준법 라이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라이더 스스로 자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오토바이 주행중 출력과 소리를 높이기 위해 머플러를 불법으로 변경한 이들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했다는 내용이다. 또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면서 오토바이를 즐기게 된 개인적 스토리를 소개했다.

그런데 위 기사는 오토바이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사람들을 모두 폭주족으로 표현함으로써 개념 규정의 오류를 범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라고 규정하려면 우선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몬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과속을 했다는 근거는 위 기사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3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주 문〉

경상일보 2012년 11월 22일자 5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투쟁 위험수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6일째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극단적인 투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높다.

노조간부가 출근선전전에서 “울산공장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울산공장내 96개 사내하청업체에 무단으로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공고’ 스티커를 붙여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21일 사내소식지인 ‘함께가는길’을 통해 하청노조의 이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노조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께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셋문앞에서 하청노조 간부 김모(34)씨가 마이크를 들고 “다음 (정규직화)특별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담벼락을 뛰어넘어 공장을 점거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벌이던 중이었다.

출근선전전에 동참한 하청 노조원 20여명은 김씨의 발언에 박수를 치며 동조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앞서 일주일 전에는 사내하청 노조원들이 울산공장에 있는 96개 사내하청업체 사무실에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공고’ 스티커를 임의로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노조는 하청업체들이 노조의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

하자 공장 문을 닫으라는 의미에서 이같은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법원의 압류 공고와 닮은 스티커여서 마치 실제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을 줘 불쾌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사업장 폐쇄조치는 국가기관의 권한이다. 무단으로 업체폐쇄 공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특히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파업과 잔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8월 죽창폭력을 휘두르더니 공장을 점거하겠다는 의도도 공공연히 드러내며 울산공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공장 불바다’ 발언과 관련 하청노조 한 간부는 “노조간부 한 개인이 발언한 것을 현대차가 마치 하청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인 양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장 폐쇄공고 스티커를 부착한 이유에 대해선 “3주전쯤 하청업체에서 노조가 벌이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붙였다. 그래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현대차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 8월2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00여명이 만장으로 사용하던 3m 짜리 대나무(죽봉)를 휘두르며 6차례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이 사태로 울산1공장이 9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돼 45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회사측은 시위에 가담한 조합원 3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노조원 26명을 폭력 등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의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파업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 보듯이 『하청노조의 극단적인 투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높다』는 식의 표현으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지적’하는 주체로 기사에 인용된 것은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이해 당사자인 현대차와 하청업체 관계자가 전부여서 객관적인 여론으로 보기도 어렵다.

기사 본문은 하청노조나 노조원의 투쟁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하청노조의 해명을 함께 전하고는 있으나 현대차 사내소식지와 현대차 및 하청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다양하게 인용하는 등 회사측 주장에 더 무게를 두어 기술하고 있다.

제목에서도 큰 제목은 「현대車 사내하청 노조 투쟁 위험수위」로 노조측에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작은 제목까지 「“울산공장 불바다 만든다” 발언에 ‘사업장 폐쇄공고’ 스티커까지」 「“안하무인 행동 도 넘었다” 사측」이라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뽑았을 뿐 노조측 해명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이 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보도라기보다는 사용자측의 시각에 맞춰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담아 독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의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244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2월 11일자 2면 「대학권역별 인기주류 살펴보니.../막 걸리高大? 와인고대!/최대 주당들은 서울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세·서강대 등이 몰려 있는 서울 서부권 대학 상권에선 수입맥주와 곡주(막걸리) 판매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또 고려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은 ‘막걸리=고대’라는 선입견과 달리 와인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헤럴드경제가 11일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를 통해 대학별 지하철역 인근 매장, 유흥상권 매장의 주류 매출(올해 1~10월)을 파악한 결과다.

서울 서부권, 동부권과 서울대를 포함한 남부권(중앙대·숭실대 등)의 공통적인 주류 판매 트렌드로는 맥주류의 매출 비중이 60~70%를 차지해 1위라는 점이 꼽힌다. 이어 소주류(10% 안팎), 막걸리, 와인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유행 선도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신촌(서부권) 일대의 주류 판매 경향. 이 지역에선 수입맥주캔(500ml+355ml)의 판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에선 페트맥주류가 판매 수위에 올랐지만, 서부권은 다양한 맛과 브랜드가 강점인 수입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많았다.

GS25 관계자는 “서부권에서 수입맥주캔이 잘 팔린 것도 특징적이지만, 이 지역에선 소주류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 다른 곳과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독한 술을 꺼리는 요즘 세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도 서부권인 셈이다.

고려대가 포함돼 있는 동부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와인의 판매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 동부권의 와인 비중은 4.2%인 데 반해 서울대·연세대·한양대 지역의 와인 판매 비중은 2~3%대에 머물렀다. 고려대를 떠올리면 막걸리가 많이 팔릴 것 같지만, 막걸리 비중만 따져보면 서울대 지역(7.6%)보다 낮았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부권의 전반적인 매출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 상대적으로 와인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이라며 “고려대 주

변의 와인 매출이 타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동부권의 변화하는 세대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주류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가 끼어 있는 남부권으로 나타났다. GS25에 따르면 서울대, 한양대·건국대, 연대·서강대, 고대·경희대 등 4개 지역의 하루 평균 주류 매출을 산출해 이를 지수화하면 서울대 지역의 매출이 평균보다 34%가 높아 1위였다. 연세대 지역은 평균보다 13% 높았고, 고려대 쪽은 평균을 밑돌아 가장 낮았다.

GS25 관계자는 “서울대 인근 지역이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건 학생 수도 많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고시생, 주민도 많아 대학가 최대 주당 지역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연세·서강대 등이 몰려 있는 서울 서부권(신촌), 고려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서울대·중앙대·숭실대 등이 있는 남부지역 등 세 지역에서 주류 매출을 조사한 결과를 다루었다. 조사 대상은 3개 지역 대학가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BGF리테일(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와 유흥상권 매장이라고 이 기사는 밝혔다.

기사는 서울 서부권·동부권·남부권의 공통적인 주류 판매 트렌드로는 맥주류의 매출 비중이 60~70%를 차지해 1위이며 소주류(10% 안팎), 막걸리, 와인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또 고려대가 포함돼 있는 동부권에서는 와인의 판매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4.2%이며 서울대·연세대·한양대 부근 지역의 와인 판매 비중은 2~3%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또 이들 3개 지역중 주류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가 끼어 있는 남부권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 조사결과는 어디까지나 3개 지역 대학 부근에 살거나 드나든 사람들의 주류 소비 통계이지, 해당 지역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만의 주류 소비만을 따로 뽑아 집계한 내용은 아니다. 위 조사결과에는 해당지역내 대학생

과 함께 주민들은 물론, 이동하는 타지역 시민들의 소비 통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기사가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막걸리고대가 아니라 와인고대’ ‘최대주당들은 서울대’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은 큰 오류다.

위 기사는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추측해 쓴 것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신문의 정확성·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확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52 신문윤리강령 위반

####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 〈주문〉

중앙일보 2013년 2월 6일자 20면 「오세훈<전 서울시장> 지우기에 급급한 서울시/‘한강르네상스 사업’ 백서 발간/전시 행정이자 예산 낭비한 사업/”전임자 정책 문제점만 부각하면 행정 연속성 측면서 적절치 않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자문과 국제학술회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2007년 7월 서울시 발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한 전시성 사업이다.”(2013년 1월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백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가 5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서

울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자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뒤바뀐 것이다. 일부에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신임 시장이 전임자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면 시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큰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5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가 내놓은 ‘한강개발사업의 자연성 영향 검토’ 백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박창근(토목공학) 관동대 교수는 백서에서 “반포·난지특화지구 등이 과도한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됐다”며 “과도한 개발 편향으로 본래 취지와 거리가 먼 사회적 갈등 이슈로 부각됐다”고 비판했다. 유정철(생물학) 경희대 교수도 “콘크리트 위에 부직포를 덮고 식물을 심은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오세훈(左), 박원순(右) 한강운하사업 역시 종합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 없이 이뤄졌으며 지천운하사업도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2, 5호선과 분당선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욱 한강시민위원장과 한봉호(조경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약간의 자연성이 가미된 인공 사업이 대부분이며, 중랑천과 안양천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은 전혀 타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은 “수변 개발을 통해 생태·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시민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인접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이 추진했던 역점 사업에 대한 백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오 전 시장 시절 진행했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후임자 입장에서 전임자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오세훈 지우기’ 식으로 전임자 정책의 문제점만 집중 부각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호(도시공학과) 중앙대 교수는 “당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을 이제 ‘올스톱’시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10년, 20년 뒤에 어떤 사업이

남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방송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3년은 너무 짧아 재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가 얼마 전 내놓은 ‘한강개발사업의 자연성 영향 검토’ 백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고 전하면서 『‘오세훈 지우기’ 식으로 전임자 정책의 문제점만 집중 부각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오 전 시장 시절에 진행했던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백서를 발간한 것도 전임자 정책을 부정한 사례로 소개했다.

편집자는 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세훈 지우기에 급급한 서울시」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는 그러나 서울시가 ‘오세훈 지우기’에 급급하다는 데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이 바뀐 뒤 서울시의 ‘말뭉치기’의 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백서 내용 가운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혹평한 전문가들의 주장도 몇 대목 소개했는데,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사업 추진단계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으로 이를 ‘오세훈 지우기’의 일환인 것처럼 기술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기자나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69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3년 3월 15일자 A31면 「**軍 ★ 50개가 한 아파트에 … 또 안보 불감증/용산 아파트 1개동에 핵심장성 28명 모여살아/**」 화재 사고·북 테러맨 軍지휘체계 무너질수도 …」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軍 ★ 50개가 한 아파트에…또 안보 불감증**

**용산 아파트 1개동에 핵심장성 28명 모여살아  
"화재 사고·北 테러맨 軍지휘체계 무너질수도"**

서울 용산구 A아파트 단지에는 매일 아침 진동경이 울려진다. 이 아파트 B동 일대는 새벽 5시부터 운전병이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 20여 대가 대기한다. 모두 '○○국○○○' '○○합○○○○' 등 번호 앞글자만 달 장식물 관용차다.

14일 새벽에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새벽 5시부터 '110국○○○○' '11합○○○○' 등 번호 앞글자만 달 채워진 그랜저 등 장성급 관용차들이 아파트를 빠져 나갔다. 흉장 처럼으로 아파트를 내려온 장군들은 운전병들에게 딱딱한 명령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이곳에서 만난 한 운전병은 "국방부에서 원스타(순찰)를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경이후 주차장에 나타난 군 관용차량은 모두 18대였다. 전날에도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군 관용차량 15대가 대기했다. A아파트는 국방부가 소유한 군 안 아파트다. 2011년 국방부가 군 안공제회 등 민간자본으로 재건축한 아파트 중 1개동에 760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특히 B동은 가장 큰 평형인 132㎡(약 43평) 2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현역 장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에 등어는 짧은 직전계통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장성 3명, 수도방위사령부 핵심 보직 장성 2명, 국

방부 핵심 보직 장성 5명 등 모두 2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B동 28가구에 장군이 아니면 입주 자체가 안 된다. 규정이 따지지 않는 육군 중령 이상 계급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 이후 영관급 장교가 거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문제는 우리 군의 핵심 장성들이 같은 아파트단지 내 같은 층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안보상 큰 위협 요소라는 점이다. 아파트 재건축 당시 국방부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런 주장은 내부에서 무시됐다.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D건설 관계자도 "아파트를 지을 때 국방부가 B동은 장군들이 살 것이지가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했었다"며 "당시에도 장군들이 이

렇게 모여 살아도 되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은 병영 밖에서 생활할 때 같은 건물 안에 장성급 2명이 함께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한미군이 주로 거주하는 이태원 소재 C아파트를 확인해 보니 1개동에 영관급 이상 장교는 1명만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거주 규정 자체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원대나 군부대 안에 있는 거주지라면 모를까 도심 캠퍼스 아파트에 모여 사는 군 거주 규정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한군 안보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아파트에 모여 사는 별첨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아파트 보안이 철저한 것도 아니다.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수준이었다. A아파트 전체에 경비실은 3곳으로 60~70명 정도 비정규직을 일용하거나 카드키 등을 대여 하는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만 출입하는 사람들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없다. 실제로 화재 발생을 위해 12~14일 사흘간 B동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통계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또 B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장성 이복만 대만 몇 통 몇 호에 사는지 알려준다. 별다른 신분 확인 절차도 없었다. 이 아파트에 대



서울 용산구의 A아파트. 이곳 B동에는 군 장성 28명이 살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인터넷에 "용산 군인아파트"를 검색하면 누구나 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 부동산중개사사무소나 슈퍼마켓, 노점상들도 이 아파트 B동에 별들이 모여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 인근 상인은 "군인 아파트에서 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안보상 중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기홍·현욱·김보성 기자

『서울 용산구 A아파트 단지에는 매일 아침 진풍경이 펼쳐진다. 이 아파트 B동 앞에는 새벽 5시부터 운전병이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 20여 대가 대기한다. 모두 ‘○○국○○○’ ‘◇◇ 합◇◇◇◇’ 등 번호판을 단 장성들 관용차다.

14일 새벽에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새벽 5시부터 ‘10국○○○○’ ‘51합◇◇◇◇’ 등 번호판을 단 체어맨 그랜저 등 장성급 관용차들이 아파트를 빠져 나갔다. 정장 차림으로 아파트를 내려온 장군들은 운전병들에게 각듯한 경례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이곳에서 만난 한 운전병은 “국방부에서 윈스타(준장)를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이곳 주차장에 나타난 군 관용차량은 모두 18대였다. 전날에도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군 관용차량 15대가 대기했다.

A아파트는 국방부가 소유한 군인 아파트다. 2011년 국방부가 군인공제회 등 민간자본으로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4개동에 76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B동은 가장 큰 평형인 132㎡(약 43평) 28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현역 장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이 동에는 합참 작전계통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장성 3명, 수도방위사령부 핵심 보직 장성 2명, 국방부 핵심 보직 장성 5명 등 모두 2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B동 28가구엔 장군이 아니면 입주 자체가 안 된다. 규정만 따지자면 육군 중령 이상 계급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부 근무 지원단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 이후 영관급 장교가 거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문제는 우리 군의 핵심 장성들이 같은 아파트단지 내 같은 동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안보상 큰 위협 요소라는 점이다. 아파트 재건축 당시부터 국방부 내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런 주장은 내부에서 무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시공할 때나 입주할 때 안보상 이유를 들어 장군들이 함께 사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곳에 살고 싶어하는 장군들이 많아 이런 반대가 묻혀 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는 별 개수를 합치면 50개는 넘을 것”이라며 “북한이 테러를 하거나 이 아파트 B동에 대형 화재만 발생해도 우리 군 지휘체계가 무너질 정도로 안보

상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D건설 관계자도 “아파트를 지을 때 국방부가 B동은 장군들이 살 것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에도 ‘장군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도 되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군은 병영 밖에서 생활할 때 같은 건물 안에 장성급 2명이 함께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한미군이 주로 거주하는 이태원 소재 C아파트를 확인해 보니 1개동에 영관급 이상 장교는 1명만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거주 규정 자체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룡대나 군부대 안에 있는 거주지라면 모를까 도심 한복판 아파트에 모여 사는데 거주 규정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군 안보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아파트에 모여 사는 별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아파트 보안이 철저한 것도 아니다.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수준이었다. A아파트 전체에 경비실은 3곳으로 60·70대 경비원 3명이 지킬 뿐이다. 각 동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키 등을 대야 하는 도어록이 설치돼 있지만 출입하는 사람들을 따라 드나들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 취재를 위해 12~14일 사흘간 B동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나 통제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또 B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장성 이름만 대면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알려줬다. 별다른 신분 확인 절차도 없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인터넷에 ‘용산 군인아파트’를 검색하면 누구나 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슈퍼마켓, 노점상들도 이 아파트 B동에 별들이 모여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 인근 상인은 “군인 아파트여서 별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이 근방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며 “그건 비밀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노점상은 아파트에 대해 몇 가지를 묻자 “혹시 간첩 아니냐”며 대답을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장군들은 우리 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장성 28명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함께 사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안보상 중대 문제”라고 주장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서울 용산에 있는 군인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한 동에 현역 장성 가족 28가구가 모여 사는 것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테러를 하거나 대형화재라도 나면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 제목도 이에 맞춰 「軍 ★ 50개가 한 아파트에 … 또 안보 불감증/용산 아파트 1개동에 핵심장성 28명 모여살아/」화재 사고·북 테러맨 軍지휘체계 무너질수도 …」라고 달았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는 국방부 소유로 2011년에 종전 군인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 것으로, 총 14개동에 760가구가 입주해 있다. 확인 결과, 입주자들은 인근 부대 근무자들로 1~2년간 임대보증금과 관리비를 내고 거주한다. 근무지를 따라 이사를 다니는 군인들을 위한 군사(軍舍) 중 하나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기사는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조성 경위 및 입주 기준,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입주 장성들이 아파트 한 동에 모여 사는 것을 ‘안보 불감증’으로 비판했다.

기사는 ‘안보 불감증’의 이유로 북한의 테러나 대형 화재 가능성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 곳곳에 정부청사나 주요 기관 및 시설 등이 즐비한 상황에서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군인아파트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부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주상복합형 초고층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한 동 전체가 초토화될 정도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화재로 인해 다수의 입주자가 사망 또는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군지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사는 ‘국방부 관계자’나 ‘군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의 입을 빌려 장성들의 밀집 거주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국방부나 실제 거주자들의 해명이나 반론은 게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견해에 치우친 나머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과장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7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3년 2월 25일자 19면 「최원병 농협회장은 ‘버티기’ 달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정치권에선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이뤄질 다음달 중순쯤 공공기관장들의 대규모 사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철학에 맞춰 업적과 상관없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져온 상황이다.

특히 ‘MB맨’으로 분류된 인물이면서 사고 기관장으로 낙인 찍혔을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자리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농협의 최원병 회장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로 MB의 측근인사로 분류돼 왔다.

최 회장은 17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07년 12월27일 실시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선거 초반에는 유력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대선 후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2차 투표에서 역전극을 일궈냈다는 분석이다.

비록 회장은 선출직이지만,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준립하고 농림식품수산부와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최원병 회장은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와 방만경영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음에도 'MB 측근'임을 과시하듯 정부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각종 사고로 얼룩질 때마다 농민단체의 사퇴 압박도 이어졌으나 최 회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2011년 12월 재선에 성공, 2015년까지 4년 더 자리를 보장받았다.

농협에선 지난 2011년 4월 대규모 해킹 사태로 며칠동안 전산장애가 발생,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최원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상근이라 내가 책임질 것이 없다”라고 밝혀 “농협의 수장으로서 그게 할 말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법률상 비상근이지만, 농협 내 주요 보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등 전반적인 업무에서 최종책임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전산사고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 기관경고와 함께 20여명의 관련 직원들에게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원병 회장은 징계를 비껴갔다.

농협에선 지난해에도 두차례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 전산사고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임직원들의 비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과천농협에선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 이후에도 '복마전' 농협에선 대출비리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8개 단위 농협에선 대출금리 조작으로 최근 3년간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농협이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등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두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원병 회장은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 노조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농협의 단면이다.

또 농협조직 내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은 2009년 622명, 2010년 1613명에

서 2011년에는 전체직원의 12.2%인 23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최원병 회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위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상당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에 상관없이 사퇴하고 있는 것처럼 최원병 농협회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사 제목은 한 발 더 나아가 「최원병 농협회장은 ‘버티기’ 달인?」이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마땅히 물러나야 하는 데 버티고 있다는 식이다.

최 회장은 2011년 12월에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전체 대의원 288표 가운데 191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2015년 12월까지로 위 기사 보도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면 2년 10개월 가량 남았다.

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로,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27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됐다.

기사는 최 회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로 각종 사고와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다. 하지만 기사가 대표적인 사고로 꼽은 2011년 4월 대규모 해킹에 따른 전산장애, 2011년 11월 과천농협의 대출 가산금리 불법 인상과 관련한 임직원 3명 구속 사건은 그 해 12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최 회장은 이들 사건에 상관없이 재신임을 받은 셈이다.

지난 해 8월 농협중앙회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최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노조가 반대해 온 농협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관련된 것이다.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농협이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장을 선거로 뽑는 것은 농민들의 출자로 이뤄진 농협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

도적 장치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주장은 농협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고, 우리 사회가 공유·공감하는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사는 비판의 당사자인 최 회장의 해명이나 반론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책임 있는 언론 보도의 영역을 벗어나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 ▲ 2013-1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 <주문>

中都日報 2013년 1월 18일자 15면 「수주 제공 빌미’ 수억원 뇌물 받아」 기사와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직 삼성전자의 사원이 재직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수주를 준다고 피어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원은 삼성전자가 2011년 6월 이건희 회장의 사내 부정부패 척결선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나 삼성 내부의 감사기능

마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천안의 한 제조업체는 2010년 A(59)부사장을 영입한 이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주를 했다. 삼성전자 2차 업체로 등록된 이 업체는 영업실적 저조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지만 몇달후 삼성전자 B(38)사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수십억원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A부사장과 B사원의 밀월관계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제공과 수억원 상당의 뇌물이 이뤄낸 결과였다. 하지만, 이들 사이는 불과 몇 년이 가질 못했고 오히려 A부사장은 쪽박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수주 제공 빌미’ 수억원 뇌물 받아**  
전직 삼성전자 사원, 하청업체 부사장과 검은거래- 혜택 끊기자 ‘고소당해’

전직 삼성전자의 사원이 재직 당시 과징금으로부터 수주를 준다고 피아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원은 삼성전자가 2011년 6월 이전의 경영의 사보 부장부에 복원선 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뇌물을 상환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삼성 내부의 감사 기능까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천안의 한 제조업체는 2010년 A(59)부사장을 영입한 이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주를 했다.

삼성전자 2차 업체로 등록된 이 업체는 영업실적 저조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지만 몇달후 삼성전자 B(38)사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수십억원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A부사장과 B사원의 밀월관계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제공과 수억원 상당의 뇌물이 이뤄낸 결과였다.

하지만, 이들 사이는 불과 몇 년이 가질 못했고 오히려 A부사장은 쪽박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A부사장은 “B사원에게 매월 600만원 가량 월급을 현금으로 쥐가며 수주를 부탁했다”며 “승용차와 신용카드도 지급했지만 B사원이 수주를 주지 않아 거래의 피해만 보게 됐다”고 연소하였다.

A부사장에 따르면 2011년 3월에서 2012년 5월까지 B사원에게 지급한 현금만도 2억4000여만원이 넘는 등 모두 5억6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원은 주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말과 평일 강원랜드로 향했다.

A부사장은 “강원랜드에 가 B사원에게 100만~600만원씩 12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며 “회사에는 장부에 기재할 수 없어 잡비나 활동비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부사장은 2011년 10월 B사원의 삼성전자 집무실에서 수백여만원의 금액을 주고 있다.

B사원은 또 A부사장에게 당시 집무실은 또 A부사장에게 당시 소속된 업체로부터 독립된 회사를 만들 것을 종용해 A부사장이 2011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B사원의 도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B사원이 3년 동안 삼성전자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구미나 감사부서에서 제구실을 못했고 2차 업체기에 사실상 삼성전자와의 직거래가 없어 가능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부사장은 “B사원이 특정 아바를 찾고 이에 따른 부자가 있었지만 수주는 주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업체가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B사원은 “A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부사장은 최근 B사원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며 앞서 B사원은 지난해 6월 피자kim707@한민\*@한민 기자

<中都日報 2013년 1월 18일자 15면>

A부사장은 “B사원에게 매월 600만원 가량 월급을 현금으로 쥐가며 수주를 부탁했다”며 “승용차와 신용카드도 지급했지만 B사원이 수주를 주지 않아 거래의 피해만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부사장에 따르면 2011년 3월에서 2012년 5월까지 B사원에게 지급한 현금만도 2억4000여만원이 넘는 등 모두 5억6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원은 주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말과 평일 강원랜드로 향했다.

A부사장은 “강원랜드에 가 B사원에게 100만~600만원씩 12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며 “회사에는 장부에 기재할 수 없어 잡비나 활동비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부사장은 2011년 10월 B사원의 삼성전자 집무실에서 수백여만

원을 급여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B사원은 또 A부사장에게 당시 소속된 업체로부터 독립된 회사를 만들 것을 중용해 A부사장이 2011년 10월께 법인을 설립했지만 B사원의 도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B사원이 2년 동안 삼성전자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구매나 감사부서에서 제구실을 못했고 2차 업체기에 사실상 삼성전자와의 직거래가 없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부사장은 “B사원이 특정 아이템을 쫓고 이에 따른 투자가 있었지만, 수주는 주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업체가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B사원은 “A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부사장은 최근 B사원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며 앞서 B사원은 지난해 6월 퇴직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삼성전자 사원에게 재직 당시 수주를 빌미로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하청업체 간부가 해당 전직 삼성전자 사원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소인인 하청업체 A부사장은 삼성전자에 몸담았던 B사원에게 수주를 위해 5억6,6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B사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일반적인 고소사건 관련 기사와는 달리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수사기관을 명시하지 않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기사는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사원은 삼성전자가 2011년 6월 이 건희 회장의 사내 부정부패 척결선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나 삼성 내부의 감사기능마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라고 기술,

마치 뇌물 수수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였고 따라서 삼성 내부의 감사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는 ‘지적’까지 덧붙이고 있다.

편집자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큰 제목을 인용부호도 없이 「‘수주 제공 빌미’ 수억원 뇌물 받아」로 달았고, 작은 제목도 인용부호 없이 「전직 삼성전자 사원, 하청업체 부사장과 검은 거래」라고 단정해 달았다.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기술하고, 이는 삼성 내부의 감사 기능의 상실이라는 단정을 덧붙이고, 이를 토대로 제목을 다는 보도행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보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의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선언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 〈주문〉

문화일보 2013년 3월 13일자 10면 「1년 전 중학생 시절 ... 교과부 ‘학폭 현장 점검’ ... /장관 온 그날도 자살학생은 맞고 있었다」 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3월 14일자 9면 「“폭력 근절” 장관이 학교 온 날도 자살 학생 폭행 당해/눈감은 당국 ... 학교폭력 실태조사 곁핥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문화일보,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북 경산 고교생 최모(15) 군이 중학교에 다닐 당시 이주호 전 교육과학부 장관이 이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학교폭력 현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이 같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학교를 찾아간 시점과 이번에 숨진 최 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유서에 남긴 기간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당국의 학교폭력 논의가 탁상에 그친 채 교육현장에 스며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숨진 최 군이 다녔던 중학교 관계자는 “2012년 2월 17일 당시 이 전 장관이 학교폭력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사 100여 명과 도서관에서 ‘필통(必通) 토크(Talk)’이라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2시간여 동안 대화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숨진 최 군의 유서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폭행당하고 가끔 금품을 빼앗기고 언어폭력도 당했다”고 적혀 있어 이 전 장관이 방문할 당시 최 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던 기간에 해당된다. ‘필통 토크’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느끼는 현장의 학교폭력 문제를 정부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자는 취지로 마련된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는 자리였다.

이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줘도 모자란 판에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로 변질되는 것이 한없이 개탄스럽다”며 “특히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해 앞으로 교내 폭력을 은폐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 학교를 시작으로 그해 3월 말까지 전국 9개 도시를 돌면서 행사를 가졌다.

당시 정부당국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통합·확대하는 한편 수사·상담·치료를 연계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학교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CCTV 설치를 늘리는 한편 민간경비원을 포함한 학생보호인력을 증원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인성 교육을 위해 각 교육청이 학생 스포츠리그를 확대하고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힘을 쏟았다.(후략)』

(국민일보)=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15)군이 다닌 중학교에서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가 1건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이 학교 학생은 47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이 학교의 학폭 위 심의 건수는 1건, 개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학폭위에서 조치한 피해·가해 학생도 각각 1명뿐이었다. 피해학생 1명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이었으며, 가해학생 1명은 특별교육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는 지난해 2월 17일 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필통 톡’ 토크쇼를 진행한 곳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학교가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로 변질하는 것이 한없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군의 유서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쓰여 있다. 이 전 장관이 이 학교를 방문할 당시에 최군은 교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교육 당국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얼마나 무력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교과부 등 학교폭력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무려 84개의 대책이 망라돼 있었다. 세부 대책들 중 비슷한 것을 추려서 묶어도 60~70개나 된다. 이번 최군 사건 이후 정부가 백화점식 대책만 나열하고 현장에 착근시키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북 경산의 고교 신입생 최모 군이 가해자로 지목한 동갑내기 학생 5명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지난해 2월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부 장관이 이 중학교를 찾아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등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장관까지 직접 방문한 학교에서마저 폭력사태가 계속될 만큼 당국의 대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편집자는 「장관 온 그날도 자살학생은 맞고 있었다」고 기사 본문에는 없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이 전 장관이 문제의 중학교를 방문한 날은 지난 해 2월 17일로, 기사는 『숨진 최 군의 유서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폭행당하고 가끔 금품을 빼앗기고 언어폭력도 당했다”고 적혀 있어 이 전 장관이 방문할 당시 최 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던 기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장관 방문 날짜가 최 군이 시달림을 당한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을 기사는 지적했을 뿐 장관이 방문한 바로 그날도 최 군이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기사 어디에도 없다.

국민일보는 문화일보의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내보낸 위 기사에서 『최군의 유서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쓰여 있다』고 전한 뒤 『이 전 장관이 이 학교를 방문할 당시에 최군은 교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주관적 해석을 덧붙였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날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큰 제목 위에는 「“폭력 근절” 장관이 학교 온 날도 자살 학생 폭행당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소제목을 달았다.

최 군이 당한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는 강조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제목과 기사는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과장·왜곡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선정보도의 금지

#### ▲ 2012-1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주문>

朝鮮日報 2012년 4월 7일자 A10면 「살인마 방엔 생리대·음란물 … 화장실은 차마 볼 수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 4월 9일자 A13면 「살인범, 시신 280조각 비닐봉지 14개에 나눠 담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4월 7일자>= 『(전략)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오씨는 1층에 살고 있었다. 회색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냉장고와 싱크대가 눈에 들어왔고, 오른쪽에 화장실 문이 보였다. 이 화장실에서 참혹한 토막살인이 이뤄졌다. 화장실 바닥은 이미 깨끗하게 씻겨 핏자국은 없었다. 선반에는 여자 생리대 4개도 보였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짐가방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벌어진 가방 사이로 옷과 속옷들이 빠져나와 방바닥을 나뒹굴었다. 바로 이 방에서 오씨는 A씨를 스페너로 두 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새벽 늦은 시간에 (A씨를) 죽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경찰은 정확한 살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위장에 남은 음식물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이어 화장실로 가 칼로 토막을 냈다고 했다.(후략)』

<4월 9일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마치 가축을 도살하듯 뼈만 앙상하게 남겨 놓았다.”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 오원춘(42)은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마치 짐승을 도축하듯 다뤘다. 지난 3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너무 엽기적이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날 수원 중부경찰서로부터 토막 난 시신이 담긴 검은 봉지 14개를 받았다.

국과수 관계자는 “봉지 하나당 20여점씩 살점 덩어리가 총 280여점이 담겨 있었다”며 “오씨가 A씨의 온몸을 난도질한 상태였다”고 말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의 기사는 조선족 오원춘(우위안춘)이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할 당시의 범행현장 상황을 수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기술한 것이지만 범행 당시 범인의 시신 훼손 및 처리 과정, 그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했다.

비록 범죄행위의 잔학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대로 기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칫 선정적인 보도가 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인간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제3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동 화
3.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매일경제 2012년 4월 27일자 A29면 「엽기 오원춘/사체훼손중에 음란사진 검색 ... 檢 “우발범죄”」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4월 27일자 9면 「〈수원 살인범〉 오원춘, 시신 훼손 중에도 음란사진 봤다」 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4월 27일자 A8면 「오원춘, 시신 훼손 중에도 음란물 봤다/칼 갈면서 스마트 폰으로 봐/검찰 여죄 밝히진 못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매일경제, 서울신문,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원춘(42)의 왜곡된 성생활을 범행 동기로 지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식배)는 귀가 여성을 납치해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살인 등)로 오씨를 26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정상환 수원지검 1차장 검사는 “오씨 살인이 계획된 범행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순간적인(성적)충동에 의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혀 ‘계획 범죄’라는 경찰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씨가 하루 평균 3차례 이상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이 있었다”면서 “잡은 성매매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접속 등으로 왜곡된 성생활을 해오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범죄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5시 46~50분 11회, 범행 직전인 오후 7시 58분~8시 47분 28회, 사체를 훼손하던 지난 2일 오전에도 6회의 음란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등 심각한 성중독 성향을 드러냈다.

오씨는 9개월간 내연관계에 있던 중국 한족 여성과 지난 1월 헤어진 뒤 주 1회 이상 성매매를 하는 등 월수입의 20%를 성매매하는 데 사용했다.』

(서울신문)=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범인의 왜곡된 성생활에서 비롯된 범죄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6일 이 사건의 범인 오원춘(42)을 사건 발생 25일 만에 기소하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검찰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오원춘의 왜곡된 성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는 범행 직전인 1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47분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사진을 검색하는 등 하루 3회 이상씩 음란물을 즐겼다. 특히 사체를 훼손 중이던 2일 오전 9시 5~7분에도 6회에 걸쳐 음란사진을 보는 태연함을 보였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부르는 등 수입의 20%를 성매매에 쏟아부을 정도로 왜곡된 성생활에 집착했다.

2007년 한국으로 건너온 뒤 거제도, 화성과 용인, 부산, 대전, 제주, 경남, 함안, 수원 등에서 막일을 하며 매주 1회 정도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가 잦은 성매매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접속 등 왜곡된 성생활을 해오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결과,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등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내몽골 거주 시절 도축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오원춘을 알고 지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다. 오는 이와관련, “사체를 내다버리기 편해서 훼손했다.”고 했었다. 또 오가 피해자 A(28)씨를 살해한

시간은 2일 새벽 2~3시쯤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새벽 5시 20분쯤이라고 했었다.(후략)』

(朝鮮日報)=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조선족 오원춘(42)이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던 중에도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감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시신을 토막 내는 과정에서 부엌칼이 무뎠지자 태연히 칼갈이로 갈면서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오원춘의 추가 범행을 밝히지 못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지식배)는 26일 오원춘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원춘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전신주 뒤에 숨어 있다 귀가하던 A(28)씨의 목을 감고 입을 막은 뒤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반항하자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2일 새벽 3~4시쯤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체를 조각낸 뒤 대형 비닐봉지 13개에 담아 버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왜곡된 성생활을 해오던 오원춘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 귀가하던 A씨를 납치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2007년 9월 입국해 수원·화성·용인·부산·대전·제주·함안·거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생활했으며, 매주 한 번 정도 성 매수를 하면서 매달 평균 수입(약 200만원)의 20% 정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출장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렀다.

검찰의 모바일 분석 결과 오원춘은 하루 3~4번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해 감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를 납치한 지난 1일에는 모두 39회에 걸쳐 음란 사진을 내려받았고, 시신을 훼손하던 도중에도 담배를 피우며 6회나 음란 사진을 내려받았다. 오원춘의 스마트폰에는 약 700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의 기사는 조선족 오원춘이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할 당시의 범행현장 상황을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기술한 것이다. 위 기사들은 왜곡된 성생활을 해오던 오원춘이 20대 여성 시신을 칼로 훼손하는 범행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 위 신문들 중에서도 특히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이 범행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시신을 훼손하던 중에도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감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시신을 토막 내는 과정에서 부엌칼이 무더지자 태연히 칼갈이로 갈면서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에 잔인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8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2년 5월 16일자 22면 「“100억 프로젝트 … 잘 안되면 손뭉고 한강 갈 각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중 하나는 ‘현빈 전 여친 황지현, 걸그룹 데뷔’였다. 당시 황지현을 중심으로 한 미모의 4인조 걸그룹이 데뷔한



것보다 몇 배는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리더 황지현에게는 ‘현빈 전 여친’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MBC ‘9회말 2아웃’ 등에 출연하며 10년간 연기자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가수로서의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오래된 연애사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하다.

그는 “사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자꾸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다. 나 역시 내 이름이 먼저 불리길 원한다. 내가 더 단단해지고 입지를 굳힌다면 그 수식어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 ▶ 완벽한 갱키즈에게도 약점이?

일반적으로 걸그룹 컨셉트는 섹시, 청순과 큐티, 보이시. 이 3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갱키즈는 뭔가 다르다. 평균 신장 1m70에 환상적인 비주얼에서 뿜어나오는 카리스마를 살짝 거뒤보면 청순한 면모도 엿보인다. 보이시한 모습 이면엔 섹시함이 공존하고, 귀여운 눈웃음까지 갖췄다.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룹이다.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어린 나이가 아니다. 청순하고 귀엽고 여성스러운 비주얼도 아니다. 기존 걸그룹과는 차별화된 팀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는 독보적인 팀이 되고자 한다”는 설명.

뚝 부러진 말씀씨까지. 이만하면 ‘함정’이 없는 그룹이지만, 스스로는 “다이아몬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며 손사래를 친다.

콤플렉스까지 줄줄 읊는다. 최수은은 근육이 잘 생기는 체질을, 이해인은 보이시한 외모를 약점으로 꼽았다. 에스더는 어깨가 넓어 ‘운동을 잘할 것’이란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면, 슈퍼모델 출신인 김혜지는 ‘주유소 공기인형’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가녀린 체형이 콤플렉스란다.

소민은 상대적으로 통통한 볼살에, 은별은 팀에서 최단신(1m 65)이라는 점에 만족하지 못했다. 황지현 역시 ‘큰 발’ 콤플렉스가 있다. 그는 “260mm~265

mm 신발을 신는다. 예전에 영화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신발을 가져오지 않아 245mm 샌들을 빌려 신고 포토라인에 나가 굴욕을 당한 적도 있다. 한국에서는 발 크기에 맞는 신발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에 나갈 때 40컬레 정도 신발을 사온 적도 있다. 지금도 사장님과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내 신발을 구하러 다닌 덕분에 내 신발이 가장 많다”고 털어놨다.

### ▶ 안되면 다 같이 손잡고 한강 가자고 ...

갱키즈는 16일 데뷔곡 유럽피언 복고 스타일의 댄스곡 ‘허니허니’를 공개한다. 이들은 이번 앨범 활동을 위해 티아라, 조세현 사진작가, 차은택 감독 등과 8박 9일 유럽 여행을 떠나 올 로케이션 재킷 및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제작비용만 100억 원대. 갱키즈라는 팀과 그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멤버들은 “요즘 사장님은 눈에 핏줄이 터질 만큼 잠을 못 주무신다. 농담으로 ‘잘 안되면 다 같이 손을 끈으로 묶고 한강에 가자’고 하실 정도로 우리와 사장님의 관계가 끈끈하다. 그래서 개인이 잘되고, 팀이 잘돼야 하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사장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갱키즈는 18일 KBS2 ‘뮤직뱅크’를 통해 첫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첫 무대에서 그동안 연습하고 노력했던 것을 다 보여 드리는 것이 당면 목표다.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신인상도 받고 싶다. 연말에 가장 바쁜 팀이 됐으면 좋겠다. 연기 활동 역시 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기사 본문과 제목에서 ‘잘 안되면 손뭉고 한강 갈 각오’라고 표현했다. 새로 데뷔해 열심히 연습하는 ‘걸 그룹’ 멤버들에게 소속사 사장이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헤아려보면 ‘잘 안되면 집단적으로 한강에 빠져 죽으러 간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예 두 손을 묶어서 물에

빠진 뒤 혹시 누구 하나라도 본능적으로 다시 헤엄쳐 살아나오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이는 ‘반드시 잘해서 성공하자’는 의지를 강조한 은유적 수사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의 언어순화나 청소년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중매체로서 이런 식의 내용을 제목으로 크게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문〉**

한겨레 2012년 9월 19일자 6면 「퇴근뒤 트위터에 ‘쥐××’ ‘가카××’/특전사 현역 중사도 ‘상관모욕죄’ 기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특수전사령부의 한 부사관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퇴근 뒤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가카새끼’ 등의 표현을 써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군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검찰은 특전사 이아무개(33) 중사가 퇴근 이후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 처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쥐새끼 부정엔 정말 부지런하구만” 등 10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사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퇴근 뒤의 언행을 문제삼고, 범죄사실에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기소하는 것은 군 내에서 건전한 비판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아무개 대위가 ‘가카새끼’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정권 들어 두번째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현역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기소하는 사례다. 이 대위는 지난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특수전사령부의 한 부사관이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취새끼’ ‘가카새끼’ 등 욕설 표현을 그대로 내보냈다.

기사 제목에는 ‘취××’ ‘가카××’로 욕설 대목을 숨겼지만 본문에는 『“취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 처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취새끼 부정엔 정말 부지런하구만”』이라는 등 욕설과 혐악한 비방을 여과 없이 실었다.

제목에서처럼 욕설을 ‘××’로 감추더라도 의미 전달에 별 지장이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내보낸 것은 편견이 작용했거나 선정성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품격과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4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2년 9월 26일자 18면 「여행사에 바 차려놓고, 부킹 여성 집단 성폭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6월 16일 광주광역시의 한 나이트클럽. 언변 좋고 외모가 말쑥한 남성 윤모(28·여행사 사장)씨가 이른바 ‘부킹(즉석 만남)’으로 만난 여성 A씨에게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권유했다. 윤씨가 데려간 곳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여행사. 사무실 한쪽에는 고급 양주와 수입 맥주 등이 30~40병 진열된 바(bar)가 차려져 있었다.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윤씨가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여행사 사장 송모(44)씨를 비롯한 30~40대 남성 3명이 ‘졸피뎀’이란 수면제를 술에 타놓았던 것이다. 이들은 여행사 사무실에서 윤씨가 여성을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던 중이었다.

이런 수법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6월 한 달에만 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5일 특수강간 혐의로 송모씨와 김모(36·전 법무법인 사무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범 윤씨는 6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 오모(44·관광 가이드)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오씨는 유명 개그맨 김모씨와 얼굴이 닮아 한때 “유명 개그맨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가 나오기도 했다. 오씨는 이 보도를 보고 해외로 달아났다.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성폭행 이지트로 활용했다. 송씨의 중학교 후배인 김씨는 광주 지역 유명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잠에서 깨어난 여성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에 보내다준 경우도 있었다. 김재성 서부경찰서 강력3팀장은 “피해자 4명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과 간호사들로 이 중 3명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A씨가 성폭행을 당하는 도중 정신을 차려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하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행사 사무실에 바를 차려놓고 상습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만난 뒤 이곳으로 유인, 집단 성폭행해온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기사는 범인들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특히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 ‘졸피뎀’의 이름을 그대로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로 이 기사는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또 모방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책임을 하지 못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4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1월 21일자 9면 「시신 매달고 … 잔인한 질주」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헤럴드경제 2012년 11월 21일자 9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사진은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 시티에서 오토바이를 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노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의 시신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을 로이터통신이 찍어 전송한 것이다.

그런데 헤럴드경제는 시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별도의 여과 조치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언론이 시신 사진을 보도할 경우 민감한 부분을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 사진에서 시신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질주하는 모습에서 느끼게 되는 충격과 섬뜩함, 혐오감 등을 감안한다면 헤럴드경제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42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총 건

〈주문〉

경남신문 2012년 12월 11일자 5면 「변종 성행위업소 ‘립카페’ 창원까지 침투」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강남에서 성행했던 변종 유사성행위 업소가 창원까지 파고들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신변종 성행위업소인 일명 립카페(lip-cafe)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7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립카페는 20분 이내 짧은 시간에 종업원이 구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신변종업소로, 올해 초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직장인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립카페의 립(lip)은 ‘입술’을 뜻한다.

적발된 립카페의 경우 외부에는 G카페라고 표시해놓고, 벨을 누르면 안에 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부에는 여종업원 대기실이 있고,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밀실 4개가 설치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20분 정도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4만 원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올해 신·변종업소인 성인휴게텔, 대딸방, 안마시술소 등 35건을 단속해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립카페가 적발된 것은 경남에서는 처음이며, 앞으로 귀청소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립카페 내부./창원중부경찰서 제공

』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에서 성행했던 변종 유사성행위 업소인 립카페가 경남 창원까지 파고들어 영업을 하다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가 비록 경찰의 수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긴 했으나 본문에는 업소의 내부 구조와 유사성행위의 방법, 소요 시간과 가격까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포함돼 있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한 립카페의 내부 사진까지 게재했다.

위 기사와 사진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에 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정 찬
2.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문〉

연합뉴스 2013년 1월 8일 11 : 54 송고 「민었던 디지털도어록, 드릴엔 속수무책 뚫렸다」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1월 9일자 7면 「디지털 도어록'도 드릴엔 속수무책」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연합뉴스,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48)씨는 지난 6일 경찰이 찾아와 절도피해사실 여부를 물어 당황했다.

김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된 아파트 현관문엔 3mm가량의 구멍이 나 있었다. 도둑은 그 구멍으로 휘어진 철사를 집어넣어 디지털도어록 버튼을 누른 뒤 문을 열고 귀금속을 훔쳐갔던 것이다.

범행날짜는 지난해 4월로, 김씨는 무려 9개월 동안 피해사실조차 몰랐다. 현관문에 난 구멍은 실리콘으로 메우고 문 색깔과 동일한 작은 스티커를 붙여 놔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들었다.

안전하리라 믿었던 디지털도어록이 이처럼 전동드릴과 철사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부산 북부경찰서가 검거한 전직 인테리어 업자의 절도 행각은 드러난 것만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 피해자수가 33명에 달했다. 피해규모만 각종 귀금속, 시계, 명품가방, 현금 등 2억원이 넘었다.

15년간 새시 시공과 인테리어 일을 해온 임모(44)씨에게 디지털도어록 열기는 '식은 죽먹기'였다.

임씨는 전동드릴로 두께 5cm의 현관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ㄱ’자로 휘어진 철사를 넣어 디지털도어록의 ‘문열림’ 버튼을 눌러 침입한 것이다.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아파트에 침입한 임씨는 다른 물건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 있는 귀금속 등 부피 작은 금품만을 훔쳐 나왔고 구멍은 실리콘과 스티커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했다.

또 임씨는 외출을 많이 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를 전후에 인테리어 업자로 위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뒤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중략)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문열림’ 버튼이 있는 특정 디지털도어록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를 막으려면 이중 보안장치를 하거나 수동 특수키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아파트 현관문 주변에 가방을 맨 입주민 아닌 사람이 배회하면 즉시 경비실 등에 연락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부산)=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48)씨는 지난 6일 경찰이 찾아와 절도피해사실 여부를 물어 당황했다.(중략)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문열림’ 버튼이 있는 특정 디지털도어록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를 막으려면 이중 보안장치를 하거나 수동 특수키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는 전동드릴과 철사로 디지털도어록을 열고 아파트에 침입, 30여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사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기사는 새시시공과 인테리어 일을 해온 40대 범인이 디지털도어록을 열고 아파트에 침입하는 과정 등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기사는 범인이 『전동드릴로 두께 5cm의 현관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ㄱ’자

로 휘어진 철사를 넣어 디지털도어록의 ‘문열림’ 버튼을 눌러 침입』했으며,『외출을 많이 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를 전후에 인테리어 업자로 위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뒤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범행수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영남일보는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를 마지막 문장만 빼고 그대로 전재했다.

전동드릴, ‘ㄱ’로 휘어진 철사 등 범행도구와 범행수법, 범행후 은폐수법 등을 세밀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 〈주문〉

한국경제 2013년 1월 30일자 A28면 「성폭행 악용되는 줄피템<마약성 수면 유도제>/인터넷 주문 3시간 만에 배달/피해 여성들 대부분 기억 못해/성폭행 입증도 쉽지 않아」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1월 30일자 10면 「성폭행 악용 ‘줄피템’이 뒤통이에 ... /술에 타 먹으면 환각효과/인터넷서 유통 관리 허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한국경제,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경제)= 『불면증 환자를 위한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성폭행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술 등에 섞인 졸피뎀을 다량 복용하면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34)와 경기 포천시에 근무하는 군의원 임모씨(31)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여성 A씨는 화장실에 간 사이 김씨 등이 술잔에 졸피뎀을 섞어 잠들게 한 뒤 두 사람이 차례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씨 일행이 건넌 술을 마시자 평소와는 다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신이 몽롱했고, 이날 일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에서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환자가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행동이 보고되기도 했다.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 광주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젊은 여성 4명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같은달 경기 성남시 분당에선 채용면접을 빌미로 졸피뎀을 커피 등에 타 먹인 뒤 여성 3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졸피뎀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는 졸피뎀을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졸피뎀’을 입력하자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서 ‘졸피뎀과 같은 환각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게시판에 나온 번호를 골라 전화하자 판매자는 “1정에 1만5000원이고 입금 후 3시간 안에 퀵서비스로 배달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판매자는 “국내에서 처방받는 졸피뎀의 용량은 정당 10mg이지만 해외 제품은 20mg으로 환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며 “2~3정만 술에 타서 여성에게 먹일 경우 거의 기억을 못하는 마약의 일종”이라고 소개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다. 이날 방문한 서울 평동의 한 내과에선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기자의 말에 담당 의사가 졸피뎀 두 달치(60정)를 바로 처방해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 장애로 졸피뎀 등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08년 18만9351명에서 2011년 32만7946명으로 73% 늘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성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해 범죄 사실 입증이 쉽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 A(34) 씨와 군의관 B(31) 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를 A 씨 집으로 초대했다. 이윽고 벌어진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C 씨는 그날 새벽 A 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경찰에 고소하면서 A 씨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섞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분당경찰서는 면접을 보러온 여성에게 졸피뎀을 탄 커피를 건네고 성폭행한 D(43)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C 씨 주장의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최근 수면유도제로 처방되는 졸피뎀(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 성폭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졸피뎀을 술에 타거나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각작용을 이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졸피뎀을 최면진정제로 분류한다. 작용 발현이 빠르고 약효 지속시간이 다른 수면제에 비해 매우 짧은 특징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졸피뎀은 짧은 지속시간으로 인해 뇌의 기능 중 사고능력과 기억력, 판단력 등의 영역은 잠든 채 나머지 기능이 먼저 깰 수 있다.

졸피뎀이 사용된 의약품에는 ‘기억상실증 및 기타 신경·정신 증상들이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다. 술과 함께 권장용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이처럼 강력한 환각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 의사처방 없이 판매되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수입 졸피뎀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병원에서도 불면증 환자에게 특별한 검사 없이 수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마취과전문의는 “프로포폴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관리대책이 만들어진 것처럼 의약품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졸피뎀 등 일부 약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규제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와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성폭행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범죄 사례와 ‘졸피뎀’의 부작용, 관리상 문제점 등을 두루 묶어 보도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위 기사들도 지적한 것처럼 과용하면 환각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환자에게 판매하도록 엄격히 규제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도는 충동적 유사 행위나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위 기사들은 성형외과 의사와 군의관이 졸피뎀을 이용해 여성 1명을 성폭행한 사례를 전하면서 『화장실에 간 사이 김씨 등이 술잔에 졸피뎀을 섞어 잠들게 한 뒤 두 사람이 차례로 성폭행했다』, 『건넌 술을 마시자 평소와는 다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신이 몽롱했고』(한국경제),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섞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면접을 보러온 여성에게 졸피뎀을 탄 커피를 건네고 성폭행한』(헤럴드경제) 등 ‘졸피뎀’을 실명으로 명기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수법과 피해자의 신체반응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한국경제는 취재기자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졸피뎀’을 불법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졸피뎀’을 악용한 범법행위가 간헐적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위 기사들과 같은 보도는 아직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독자들에게 쓸 데 없이 위험한 정보를 알려줘 비슷한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위 기사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40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 〈주문〉

東亞日報 2013년 2월 6일자 A12면 「성폭행 신고할까봐 ... 동반자살 거부해서 ... 4시간새 연쇄살인/■강간살인 전과 30대, 출소 19개월만에 2명 살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0대 강간살인 전과자가 출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하루에 두 명의 여성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목 졸라 살해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알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4시간 만에 30대 주부까지 숨지게 한 김모 씨(33·무직)를 붙잡아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옛 직장 동료 최모 씨(20·여)에게서 ‘돈 100만원을 빌려준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만나면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인 광주 북구 삼각동 모 아파트로 유인했다. 4일 오후 5시 최 씨와 함께 아파트에 도착한 김 씨는 최 씨를 성폭행하면서 살해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울면서 쳐다보는데 눈빛이 신고할

것 같아 손과 스카프로 두 차례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범행 후 시신을 배란다에 숨겼다.

김 씨는 집을 나와 오후 7시 반 광주 광산구의 한 택지지구에서 이모 씨(39·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김 씨는 이 씨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 김 씨는 한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씨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범행 사실을 털어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함께 자살하자”고 했지만 거부해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두 차례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범행 후 이 씨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챙겼다. 김 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이 씨의 시신을 넣고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오후 11시 23분 김 씨의 어머니가 배란다에서 최 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5일 오전 모텔에서 나와 승용차를 몰고 전남 담양으로 향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자살하기 위해 농약을 사려고 담양에 가려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예전에 은신했던 곳으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과 4범으로 경찰이 ‘살인 우범자’로 분류해 온 김 씨는 1999년 1월 모텔에서 청소를 하던 4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을 하며 전화기 줄로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성폭행이 끝나자 다시 전화기 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담양 산속에 숨어있다 붙잡혀 12년 형을 살고 2011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이번 피해 여성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들을 목 조르며 성폭행하는 과정에 집착하는 변태적 성욕을 가졌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1999년처럼 피해 여성 2명의 목을 두 차례 반복적으로 조르며 살해했기 때문이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위 기사를 통해 30대 강간살인 전과자가 출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하루에 여성 두 명을 4시간 사이에 똑같이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울면서 쳐다보는데 눈빛이 신고할 것 같아 손과 스카프로 두 차례 목을 졸랐다”』, 『1999년 1월 모텔에서 청소를 하던 4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을 하며 전화기 줄로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성폭행이 끝나자 다시 전화기 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등 범행도구, 범행수법과 섬뜩하고 잔인한 범행 순간까지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했다.

이 같은 기사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 보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4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2.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 〈주문〉

대구일보 2013년 2월 1일자 5면 「“불륜 채무 조사 맡겨주세요”/영화 뺨치는 ‘추적자’덜미」 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2월 6일자 23면 「‘백주대낮에’ ... 무서운 2인조 강도/주부 납치해 현금 뺏은 뒤 도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대구일보,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일보)= 『“불륜 현장이요? 의뢰만 하세요. 다 잡아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남편의 미심쩍은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주부 현모(44·여)씨는 남편의 뒤를 캐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미행을 할 수 없는 노릇이

라 우연히 알게 된 한 심부름센터를 찾았다. 심부름센터는 허가 자체가 안 되는 불법 업소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백씨는 현씨 남편 뒷조사를 하는 대가로 400만원을 챙겼다. 백씨는 뒷조사를 위해 '007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다. 위치추적기는 물론 자동으로 녹화되는 안경과 손목시계 등.

먼저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남편의 뒤를 쫓았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백씨에게 불륜현장을 잡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현씨의 남편이 내연녀와 벌인 불륜현장을 담은 동영상은 현씨에 건네줬다. 백씨에게 맡겨진 뒷조사는 배우자의 불륜과 채무자 소재 파악, 채권 회수 등이다. 그는 의뢰받은 일을 척척 처리했다. 마치 첩보영화나 추리소설처럼 뒷조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 조사나, 채무자의 소재 파악, 채권 회수를 위한 의뢰가 주를 이뤘다.

백씨의 뒷조사는 첩보영화나 추리소설의 한 장면과 흡사했다. 미행과 매복은 기본. 의뢰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보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불륜 현장으로 의뢰자를 직접 불러 확인하게 하기도.

그는 심부름센터를 하기 전인 지난 2009년 민간조사협회를 설립하고, 한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민간조사법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했다. 제법 인기가 있었다. 강좌당 15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인기 강사였다.

자신감이 붙은 그는 지난해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1월 직접 실행으로 옮겼다.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 첫 업무였다. 처음 하는 뒷조사라서 인지 금세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서 물러설 백씨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불륜 뒷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자신감이 붙은 그에게 의뢰인이 몰리자 보수로 5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챙길 수 있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백씨가 뒷조사로 번 돈은 5천만원이 넘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보

호법 위반 등)로 백씨를 구속하고, 조사를 의뢰한 김모(3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한 사람이나 의뢰한 자 모두가 범죄자다”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를 추적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백주대낮에 용인의 한 승마장 주차장에서 2인조 강도가 부녀자를 납치해 수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한 승마장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주부 A(53)씨를 위협,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

이어 자신들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도록 A씨의 고개를 숙이게 하고 장갑을 착용한 채로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흥기로 위협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수원 영화동까지 A씨 차량으로 이동한 이들은 근처 현금인출기 2곳에서 현금 320만원을 인출하고 수중에 있던 돈까지 포함해 모두 600여만원을 강제로 뺏은 뒤 도주했다.

자신의 차량과 함께 수원 조원동 CGV 맞은편 주택가 골목길에 버려진 A씨는 강도들이 도망간 뒤 오후 2시 30분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건장한 체격을 한 범인들은 두터운 겨울 잠바와 야구모자, 청바지 차림을 했으며 차량을 버린 후 CGV가 보이는 대로 방면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다.

사건 발생지인 용인동부경찰서와 피해자가 풀려난 수원중부경찰서는 현금 인출기 내 CCTV와 부녀자를 버리고 도주한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유층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과 확보한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

해 금액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기사는 돈을 받고 개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한 불법 심부름센터의 범죄행각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범인의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드라마틱하게 소개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기사는 첫 리드문장에서부터 『“불륜 현장이요? 의뢰만 하세요. 다 잡아 드립니다.”』고 했고, 기사 제목도 「“불륜 채무 조사 맡겨주세요”』라고 달았다. 기사는 또 위치추적기, 자동으로 녹화되는 안경과 손목시계 등 첨단 뒷조사 장비를 이용한 범행과정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또 범인이 많게는 900만원에 이르는 의뢰비로 단 몇 개월 사이 5천만원 이상을 벌었다는 식으로 직업인양 다루었다.

중부일보의 기사는 대낮 2인조 강도가 50대 주부를 납치해 600여 만원을 강탈해 달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범행과정을 구체적이면서 세밀하게 묘사했다. 기사는 2인조 강도가 외제승용차를 끌고 운동을 온 주부를 범행대상자로 삼아 납치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탄로 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인출하는 범행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들 신문의 기사는 매우 선정적이며,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2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1월 31일자 10면 「흙탕물 빠지자 강바닥에 시신 78구 ...  
“시리아 전례없는 공포”」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경향신문 2013년 1월 31일자 10면〉

경향신문의 위 사진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북부도시 알레포에서 강물이 빠진 뒤 강바닥에서 발견된 시신 78구 가운데 일부를 AP통신이 찍어 전송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흙탕물 투성으로 두 손이 묶인 채 머리에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된 시신들의 참혹한 모습을 아무런 여과 조치 없이 가로 5단 크기로 키워 적나라하게 내보냈다.

시신 관련 사진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과 섬뜩함, 혐오감 등을 감안해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언론 관행에 비추어볼 때 경향신문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73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3년 3월 4일자 A20면 「알카에다, 살생부 11명 명단과 테러 매뉴얼 공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차량에 불을 붙일 때 타이어에 휘발유 붓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불을 붙이기 전 CCTV 카메라 위치를 먼저 확인하라’ ‘불길이 자신에게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라’ … .

국제 테러집단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최근 발행한 온라인 영문 기관지 ‘인스파이어(Inspire)’에서 차량 방화 방법, 교통사고 유도법 등 테러 매뉴얼을 자세히 소개했다. AQAP는 “차량에 불 지르기는 매우 쉽다. 차량은 어딘가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단계별로 적었다. ‘교통사고 일으키기’ 기사에서는 비 오는 날 도로에 기름을 뿌려 자동차가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간단한 지침만 따르면 당신도 인명을 살상하는 매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AQAP는 또 서방 인사 11명의 이름을 적시하고 이들을 “생포 또는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살생부 명단’에는 네덜란드 반(反)이슬람주의 정치인 헤르트 빌더르스, 소설 ‘악마의 시’ 저자 셸먼 루시디, 코란 화형식을 벌였던 테리 존스 목사 등이 포함됐다. ‘논설’에서는 “프랑스가 말리 내전 개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후회하도록 해주겠다”고 경고했다.

AQAP 기관지 ‘인스파이어’는 ‘영감(靈感)’이란 뜻으로 2010년 6월 창간했다. ‘어머니 부엌에서 폭탄 만드는 방법’ ‘리모컨을 이용한 원격 폭탄 제조법’ ‘올바른 총기 사용 자세’ 등 개인이 테러를 수행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다. 1년 4회 발행하며 이번이 10호째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제 테러집단인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가 온라인 영문기관지 ‘인스파이어’(Inspire)에 차량 방화 방법과 교통사고 유도법 등 테러 매뉴얼을 자세하게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그같은 테러 방법을 일반 독자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차량에 불을 붙일 때 타이어에 휘발유 붓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불을 붙이기 전 CCTV 카메라 위치를 먼저 확인하라’ ‘불길이 자신에게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라’ … 』

기사는 또 이 기관지가 거명한 서방인사 살생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국제적 테러집단이 선전하고 있는 테러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테러의 확산을 원하는 이들의 노력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살생부 내용을 아무런 비판적인 지적이 없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들의 살인교사 행위를 방관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문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사실 보도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일부 독자의 저급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겠다는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로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7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3년 3월 19일자 A10면 「쏟아지는 합성 마약 ... 인터넷서 마구 팔린다/마약류로 지정 안돼 '합법 마약'으로 버젓이 거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작용 없는 100% 클린 ㅇ(환각) 여행! 섭취하시면 꿈과 현실을 넘나 들고 카펫을 타고 날아다니는 황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합법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합법 엑스(엑스터시)’나 ‘합법 마약’을 검색하면 광고 글 수백 개가 뜬다. 광고 글은 이 마약들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마약이나 유해화학 물질로 등록되지 않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구매자들은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룻밤 정말 잘 놀았습니다”, “부작용 없고 다음 날 썩썩하니 안심하세요”라는 이용 후기를 남겨 놓고 있다. 한때 마약 대용품으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러미날’ 같은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단속되지만 최근 유행하는 ‘합법 마약’은 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도 않다. ‘허브’ 등으로 위장해 수입되기도 한다.

이런 ‘합법 마약’을 디자이너 드러그(designer drug·합성 마약)라 부르고 있다. 디자이너 드러그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코카인 합성물(Cok-N), 최음제(파퍼·popper) 등 30여 종이 인기 품목으로, 100g당 10만~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 디자이너 드러그 판매사이트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110여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물건을 잘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디자이너 드러그가 법망(法網)을 피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 설명란에는 “복용 후 2시간이면 황홀감이 시작돼 옆 사람과 제대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나 와인과 섞어 드세요”라고 적혀 있다.

디자이너 드러그 사이트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책이나 우편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통관에서 절대 걸릴 일이 없다”면서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합법 제품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주문하시라”고 권유했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류한 뒤 배송자에게 되돌려보내지만, 이를 판매·유통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기는 어렵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디자이너 드러그는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위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롭게 발견된 환각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마약으로 지정하기 전 계속 신종 물질이 등장해 속도에서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 A제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사이 B제품, C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식이다. 본지 확인 결과, 디자이너 드러그 판매 사이트의 ‘베스트 제품’ 5개 가운데 4개는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등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식약청 강호일 약리연구과장은 18일 “최근 1~2년 사이에 화학회사를 가장한 외국회사들이 합성 약품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진 마약이 나오기 때문에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자이너 드러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근육마비·구토 등 인체에 상당한 부작용을 끼친다고 말한다. 실제 작년 6월 영국 에든버러에선 20대 남자가 축제에서 디자이너 드러그를 복용한 뒤 돌연 사망했다. 강남을지병원 조성남 원장은 “디자이너 드러그라는 게 결국은 기존 마약과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학구조를 바꾼 것”이라며 “중독·금단현상도 기존 마약과 비슷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다가는 헤어날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관리 당국은 임시 마약류

목록을 광범위하게 수정하고 모든 환각 물질 거래는 ‘불법’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마약과 비슷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이른바 ‘합성 마약’(designer drug)이 인터넷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성 기사다. 합성마약은 기존 마약류의 화학성분을 재조합해 만들었지만 신중이다 보니 마약이나 유해화학물질에 등록돼 있지 않아 단속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코카인 합성물과 최음제 등 30여 종이 인기 품목으로, 100g당 10만~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복용 후 2시간이면 황홀감이 시작돼 옆 사람과 제대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나 와인과 섞어 드세요”』등 자극적인 ‘제품설명’ 문구까지 그대로 소개했다.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룻밤 정말 잘 놀았습니다”, “부작용 없고 다음 날 썩썩하니 안심하세요”』 등 ‘이용 후기’도 호기심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책이나 우편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통관에서 절대 걸릴 일이 없다”면서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합법 제품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주문하시라”』라고 구매를 충동질하는 합성 마약 사이트 관계자와의 통화내용도 여과 없이 소개했다.

朝鮮日報은 위 기사에 딸린 ‘합성 마약류의 인터넷 판매 사례’라는 제목의 별개 난을 통해 ‘엑스터시 파퍼’라는 제품이 엑스터시 대용의 방향제 타입으로, 개봉해서 실내에 두면 5~10분내에 환각작용이 일어난다는 등 ‘투약방법’과 ‘환각효과’까지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합성 마약’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실체가 상당 부분 알려졌다 하더라도 위 기사처럼 사용법과 효과, 구매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하는 것은 아직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

년을 포함한 다수 독자들의 호기심과 구매욕구를 자극할 소지가 크다. 또 그와 연관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위 기사는 책임 있는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머니투데이 2013년 3월 5일자 18면 「성폭행 후 마취제 주사/음란물이 ‘범행교과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모씨(29)는 항상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꼈다. 어렸을 적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정씨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중학교까지만 다닌 정씨는 여러 일을 전전하다 2년 전부터 가구배달원으로 일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수입은 한달에 100만원에 그쳤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어려운 생활에 불만을 느낀 정씨가 손을 댄 것은 일본 성인음란물. 완력을 이용해 여성을 마음대로 다루는 성폭행 동영상 보면서 그는 자신이 등장인물인 듯 한 상상을 하며 불만을 해소했다. 상상이 현실로 탈바꿈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9월부터 정씨는 가구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홀로 사는 여성의 집 열쇠를 훔치기 시작했다. 음란물을 보며 꿈꿔온 성폭행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

빈 집에서 신분증과 속옷을 훔치기도 했다. 외출한 집 주인들은 가구 배달원이라고 하면 순순히 집열쇠의 위치를 알려줬다.

정씨는 마취주사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경기도 퇴계원의 한 동물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럼퐁(Rompum)’이라는 동물마취제를 구입했다.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약품이어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몇달 동안 범행을 준비하던 정씨는 지난 1월 광진구 화양동 원룸에 가구배달을 나갔다 만난 집주인 김모씨(24·여)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한 달 뒤인 지난달 23일 오전10시 정씨는 김씨 집에 찾아갔다. 가스검침원이라고 속였다. 집에 들어간 정씨는 음란물에서 본 것처럼 마이크줄과 테이프 등으로 김씨의 손을 묶고 성폭행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럼퐁을 김씨의 엉덩이에 주사한 뒤 달아났다. 곧바로 인근 현금인출기를 찾은 정씨는 훔친 김씨의 카드로 35만원을 인출했다.

하지만 동물마취제 럼퐁은 초식동물에게 유효할 뿐 사람에게에는 효과가 없었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주변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정씨가 범행 직후 한 가구점 화물차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가구점 주위에 잠복해 범행 나흘 만에 정씨를 검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8일 가구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간, 특수강도)로 정씨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이 정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5~6편의 일본음란물이 발견됐다. 모두 성폭행을 다룬 음란물로 그 중 한 편에는 마취주사를 이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불우한 현실을 잊고자 음란물에 빠져 지내던 20대 정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찰은 정씨의 집에서 발견된 다른 집열쇠와 여성 신분증 및 속옷 등을 보고 여죄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를 통해 성인 음란물에 빠진 가구배달원 정 모 씨(29)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정씨가 ‘럼푼’이라는 동물마취제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하려 했고, 가스검침원을 사칭해 피해자 집에 침입했으며 『음란물에서 본 것처럼 마이크 줄과 테이프 등으로 김씨의 손을 묶고 성폭행했다』는 등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전했다.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럼푼을 김씨의 엉덩이에 주사한 뒤 달아났다』 등 유사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내용도 그대로 보도했다. 『외출한 집 주인들은 가구 배달원이라고 하면 순순히 집열쇠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내용 역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사 중간에는 주사기, 여성 입술과 다리, 신음소리 등을 담은 자극적인 그림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7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 〈주문〉

부산일보 2013년 2월 27일자 8면 「스마트폰 ‘몰카 탈옥’ 폰맹도 20분이면 OK!」 제목의 기사, 경인일보 3월 7일자 23면 「10분만에 신분증 위조 … 술집 가고 담배사는 10대」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부산일보,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 『스마트폰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제작돼 출고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표준에 따른 조치다. 몰래카메라(몰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스마트폰 초보자인 본보 기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시도한 결과, 15분 만에 무음(無音) 상태를 만들 수 있었다. 정부의 강제 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기자는 26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도해 봤다.

먼저 기존 운영체제가 아닌 불법 운영체제에서 앱(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됐다.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을 흔히 ‘탈옥’(jailbreak·iOS)이나 ‘루팅’(rooting·안드로이드)이라고 부른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기자가 탈옥하는 데 20분도 채 안 걸렸다. 탈옥이 처음이라 인터넷을 검색해 살펴보고 탈옥법을 꼼꼼히 읽었기에 그 정도 걸린 것이다. 익숙한 사람은 훨씬 손쉽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탈옥을 위해 ‘evas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다운받은 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원래 프랑스로 탈옥을 뜻하는 단어는 evasion이지만 불법 프로그램이라 검색이 안 돼 알파벳 O 자리에 숫자 0을 집어넣은 것이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간단하게 jailbreak(탈옥)라는 버튼을 누르면 3분이 안 돼 탈옥에 성공했다.

이후 기존 앱스토어(앱을 다운 받는 곳)가 아니라 자동 생성된 cydia(시디아)라는 곳을 통해 필요한 소스(프로그램 재료)와 앱을 다운 받았다. 이로써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새로운 체제는 낯설었지만 인기 좋은 소스 4개를 설치하라는 탈옥 지침에

따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고작 15분이 걸렸다.

탈옥 뒤 검색해 본 결과, 무음 카메라 관련 앱은 30개가 넘었다.

다 포함해 30분이면 손쉽게 무음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무음 카메라 앱은 기능이 떨어지는 데 비해 탈옥이나 루팅을 통하면 별도 앱을 이용하지 않고도 음 소거가 가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낸 자료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대상자 중 탈옥·루팅 시도 비율이 25.1%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는 특히 사람이 많은 도시철도에서 잦다.

부산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몰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하철수사대 관계자는 “7명 모두 피해자가 눈치채고 신고한 경우다”며 “피해자 신고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휴대폰을 확인할 수도 없고 용의자가 문자 보내던 중이었다고 둘러대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스마트폰으로 여성 동료 2명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모(30) 씨가 27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이 용변을 보는 옆 칸으로 들어가 여직원 2명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촬영 기미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다.』

(경인일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수원역 인근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 이모(18)군은 기자에게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꺼내놓았다.

이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왔던 청소년들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30여개를 압수해 경찰에 넘겼다. 이군이 보여준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웠지만, 위·변조 경험이 있는 이군은 쉽게 구분해

냈다.

이군이 알려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위·변조는 놀랍게도 공업용 아세톤과 투명 라벨지만으로 손쉽게 가능했다.

이군은 “최근에는 공업용 아세톤으로 일부 숫자만 지워 라벨지에 유사한 글꼴을 입혀 붙이는 수법을 주로 쓴다”며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글꼴을 사용해도 자간, 글씨 크기 등을 맞추고 신분증에 있는 투명 막을 티 안 나게 떼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귀띔했다.

이군은 또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비해 의심을 덜 받는 데다 지문이 없어 위·변조가 더 쉽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술집, 담뱃가게 등은 교묘해진 수법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정황이 밝혀져도 행정심판 등을 거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원역 인근 술집에는 100만원가량 하는 ‘신분증위변조시스템 및 지문검사기’까지 등장했다. 정상적인 신분증은 기계화면에 양면이 나타나지만, 위·변조된 신분증은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문검사를 통해 뒤의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보여 달라고 해서 신분증과 대조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있다.

한 호프집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가 교묘해지다 보니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단속 등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며겨자 먹기로 고가의 신분증검사기를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기사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몰래카메라(몰카) 피해 실태와 구체

적인 범행 수법을 다루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술표준에 따라 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한 장치다.

그런데 부산일보 기사는 이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는 스마트폰 초보자라고 소개한 취재기자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무음 상태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 이 불법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까지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경인일보의 기사는 10대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집과 담뱃가게를 이용하는 실태를 다루면서 신분증 위 변조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 『공업용 아세톤으로 일부 숫자만 지워 라벨지에 유사한 글꼴을 입혀 붙인다』, 『똑같은 글꼴을 사용해도 자간, 글씨 크기 등을 맞추고 신분증에 있는 투명 막을 티 안나게 떼어내는 것이 관건』,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비해 의심을 덜 받는 데다 지문이 없어 위·변조가 더 쉽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들 신문의 기사는 매우 선정적이며,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3월 11일자 23면 「“성차별 철폐하라”」 제목의 사진, 문화일보 3월 12일자 22면 「성당 앞서 인권시위」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헤럴드경제 2013년 3월 11일자 23면>



<문화일보 3월 12일자 22면>

위 사진은 우크라이나 여성단체인 피멘(FEMEN)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성당 앞에서 아래 주요 부위만 가린 반라 상태로 흑인, 동성애자, 여성들의 인권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을 AP통신이 찍어 전송한 것이다. 헤럴드경제는 3월 11일자에, 문화일보는 하루 늦은 3월 12일자 신문에 위 사진을 게재했다. 여성들의 반라 또는 전라 사진의 무분별한 게재는 신문의 품위를 해치고 성적 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보도 관행에 비추어볼 때 헤럴드경제와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답변의 기회

##### ▲ 2012-1059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 〈주문〉

국민일보 2012년 3월 30일자 4면 「선관위 제출서류에 의대생 아닌 생물학과 중퇴 기재/‘완득이’ 이자스민 학력 논란/민주 “공개적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에 공천된 필리핀 출신 귀화여성 이자스민(34) 후

보가 학력위조 논란에 휘말렸다. 명문 의대생이라던 이 후보가 알고 보니 생물학과 중퇴가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필리핀 아테네오데다바오(Ateneo de Davao)대 생물학과 중퇴(1993.06~1996. 06)’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는 그동안 필리핀 명문 의대를 다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밝혀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한류열풍사랑’에는 “의대생 출신이었던 이 후보가 갑자기 생물학과 출신으로 변경됐다”는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양보현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의대에 가기 위해 입학조건인 생물학과를 다녔을 수 있고 그래서 의대생이라고 밝혔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학력위조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밝히고 사과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슬그머니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만 고쳐놓은 일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을 받은 필리핀 출신 귀화여성 이자스민 후보의 학력이 명문 의대생 출신으로 당초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생물학과 중퇴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자스민 후보는 그동안 필리핀 명문의대를 다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밝혀왔지만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학력을 ‘필리핀 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 생물학과 중퇴’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자스민 후보가 이와 관련, “내가 다닌 아테네오 대학의 자연 과학부는 대부분 학생이 의대를 지망해 한국의 의예과 개념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이자스민 후보의 해명이나 반론을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 〈주문〉

서울경제 2012년 5월 8일자 1면 「백화점에 “중기매장 줘라” … 공정위의 월권」 제목의 기사, 3면 「동반성장 조급증에 기업 옥죄고 시장질서 파괴 ‘관치의 전형’」, 「소비자는 인터넷·SNS 이용으로 스마트해지는데 … /정부는 여전히 구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백화점에 “중기매장 줘라” …〉= 『조사권과 과징금을 무기로 반(反)시장적 강요를 일삼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백화점 등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설치를 요구, 월권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를 막는 게 본연의 임무인 공정위가 민간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인 상품 구성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권한남용을 하고 있어 위법논란마저 일 전망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공정위의 업무 메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중소기업히트 500(가칭)’상설 매장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가 보낸 이메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히트 500의 백화점 내 상설 매장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매장 설치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대해 유통업체들이 답변을 주저하자 공정위는 오는 9일 시중 백화점 담당자 등을 불러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말을 듣지 않자 사실상 실행행사에 나서는 셈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히트 500 매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공정위측에서 담당자와 9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연초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넓힌다며 백화점 등에 중기 매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다가 진척이 없자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과에 목이 마른 행정기관들이 서로 힘을 보태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기업간 경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형로펌의 A변호사도 “공정위가 중소기업 전용 매장 운영을 달라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동반성장 조급증에 기업 옥죄고...〉=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매장 요구 메일은 공정위가 한건주의 전시행정을 위해 시장을 파괴하고 기업의 목을 죄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약, 기름값 등 물가잡기,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강요해온 공정위가 급기야 백화점 내 중소기업 매장 영업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점은 공정위의 이 같은 행태가 실질적 효과보다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에 그칠 게 뻔하다는 사실이다. 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통해 똑똑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억지로 중소기업 제품을 들이치는 식의 발상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강제로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설령 유통업체들이 억지로 이를 따른다고 해도 오래갈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후략)』

〈소비자는 인터넷·SNS 이용으로 스마트해지는데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유통업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강요하는 데는 일단 중소기업 제품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잘 팔릴 것이라는 ‘어리석고 헛된 믿음’이 숨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똑똑한’ 요즘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낡은 사고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꼭 대형매장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제품도) 상품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판매 루트가 열린다”며 “경쟁력 없는 상품을 무조건 백화점에 들이민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중략)

물론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라는 기본 취지도 중요하지만 이는 지금처럼 단순히 매장을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제대로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몇몇 특정 중소기업체의 판로를 뚫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잠깐의 가시적인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과연 중소기업 전체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3사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는 민간 유통업체의 고유권한인 상품구성까지 요구하는 권한남용 행위라는 비판적 여론을 함께 묶어 위 적시 1면 머리기사와 3면 두 건의 해설기사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5월 7일에 발행된 5월 8일자 초판에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고, 일부 다른 신문들도 “동반성장 차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권유이지, 매장 설치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

는 공정위의 해명을 곁들여 5월 8일자로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그러나 공정위의 해명이나 반론을 5월 8일자 초판은 물론 아침 배달판, 그리고 다음 날 신문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3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충청타임즈 발행인 박 재 규
2.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3. 대구신문 발행인 최 재 왕
4.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5.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6. 忠淸日報 발행인 조 승 남

〈주문〉

충청타임즈 2012년 7월 16일자 16면 「아산시 인사 신뢰성 논란」 제목의 기사, 충북일보 8월 6일자 1면 「음성군, 주인 모르게 토지감정평가 ‘논란’」 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8월 7일자 4면 「대구시의회, 무능행정 맹폭 … 市는 무대응」 제목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8월 14일자 1면 「도내 지자체, 민원수수료 ‘장삿속’」 제목의 기사, 中都日報 8월 14일자 15면 「혈세로 관광성 외유 ‘성과는 글썸…」」 제목의 기사, 忠淸日報 8월 20일자 1면 「대형마트, 불법영업도 ‘연중무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위 6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청타임즈)= 『아산시가 지난 12일 실시한 5급(사무관) 이하 109명에 대

한 하반기 인사 정보가 특정 시민들로부터 먼저 흘러나오면서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민선5기 출범 이후 논공행상과 무원칙 코드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반환점을 돈 현재 공무원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특히 복 시장이 시정 책임을 맡으면서 낙하산 인사는 다소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인사 정보 보안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무평정과 능력 보다는 나이순으로 승진자가 일부 결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번 인사도 근무평점이 높은 공무원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는 후문과 승진자 대부분이 시민들에게 흘러나온 인물들이 공교롭게 발탁됐으며 한 사무관은 직렬과 관계 없는 부서에 배치되기도 했다.

신정호사업소의 경우 최근 여러 명의 소장이 거쳐갔고 이번 인사에서는 공석으로 남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최근 2년간 신정호사업소장이 몇명이었는지 따지다 보면 3개월짜리 사업소장이라는 말이 밖에서 떠도는 소문이 아닌 원칙 없는 인사”라고 지적 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지난 12일 인사가 발표되기 이전에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으며, 이런 소식은 공무원 내부에서 퍼졌고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 발표 이전에 영향력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봤거나 줄을 대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록 인사 후에는 불만의 목소리는 없을 수 없지만,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특정시민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공무원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 공무원은 “내년 그 어느 때 보다 중간 간부 승진 기회가 많아 승진 대상자들이 특정 시민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다”며 “잡음을 없애려면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속보= 음성 생극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 매입과정에서 토지주도 모르는 사이 토지 감정평가는 물론 토지보상까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생극면 공무원의 적극 개입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시까지 받았지만 음성군이 혼계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재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0년에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D개발의 참여로 포기한 S업체(청주 상당)가 보관중인 여러장의 음성군 공문서로 밝혀졌다.

민간업체 차원의 생극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토지감정평가를 위한 사용승락 협조, 토지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등의 모든 협조요청 사항을 생극면 공문서로 작성해 발송했다.

2010년 1월 15일 생극면이 토지주들에게 발송한 공문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할 경우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사업시행사 선정,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 토지 수용 등의 절차로 인해 4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사용승락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생극산업단지 추진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공문서는 생극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로부터 생극산단이 음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공문서다.

토지감정평가 의뢰 용역 역시 생극면 공문서를 통해 발주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도 생극면이 직접 나섰다.

예정부지 토지감정은 충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감정을 통해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돼있다. 그러나 생극산업단지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산업개발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생극면에서 임의로 감정평가사에 공문을 발송해 사유지를 무단으로 감정평가했다.』

(대구신문)=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무능행정을 겨냥, 연일 맹폭을 가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무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대구시간 심각한 대립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여름 삼복더위를 무색하게 하듯 대구시가 펼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증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여름 하한기를 맞고 있는 시의회지만 시 의원들은 여름 휴가도 잇은 채 작성한 듯 대구시의 행정·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원구 행정자치 위원장과 이동희 의원, 송세달 부의장 등은 최근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 무책임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태클을 걸고 나섰다.

대구시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재난관리 기금 등 각종 기금을 편법 전용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것을 비롯 지역 소방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초과근무수당이 500억원에 이르는 등 충분한 재정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 예비비가 바닥나는 사태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시민들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실명제도 거론하기도 해 대구시를 무안케 했다.

이동희 의원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대구 화장장 확장 문제와 관련한 대구시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질책했고 송세달 부의장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작조차 못한 달성토성 복원조성 사업을 거론, 힘들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구시의 무능행정에 채찍질을 가했다.

문제는 대구시의회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해명조차 않는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정가는 이같은 대구시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자기만의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가 연일 무능행정을 질책 받고 있지만 아집만을 내

세우며 시민들을 도외시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잘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따라 각종 민원 처리와 관련, 해당 민원인들에게 정부가 정해 놓은 수수료 표준금액 보다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상당수 민원 처리 수수료 부과 금액이 정부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표준금액 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은 동일한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시 단위 지역과 군 지역간 수수료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을 비롯해 14개 시군에서는 각종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 정부의 수수료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조례를 정해 민원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이 징수하는 각종 민원 처리 수수료 가운데는 정부의 수수료 표준금액을 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 중개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에 따른 정부의 민원 처리 수수료 표준 금액은 800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9천원을, 남원시는 5천원, 무주군도 2천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산과 정읍, 김제, 진안, 장수, 고창군 등은 정부 표준금액을 징수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전북도의 경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 허가 업무 처리와 관련 수수료를 1만4천원으로 책정해 정부 표준금액(1천500원) 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에서도 순창군은 3만원, 전주시와 남원시는 2만5천원, 고창군은 2만2천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都日報)=『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최근 잇따라 거액의 혈세로 국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성과가 불투명해 여전히 관광성 외유 논란을 낳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달 16~20일 재난안전과 1명, 건설사업소 1명,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2명 등 5명으로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중국 베이징과 일본 오사카, 고베 등을 다녀왔다.

당시 해외연수 비용은 1인당 190만원씩 모두 950만원이 사용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천안 안전체험관 건립에는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안전체험관은 오는 11월 말 건축 실시설계가 끝나기 때문으로 이들의 연수가 전시분야에 적용될 지 불투명하고, 현재 구상 중인 15개 체험관에 대한 적용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혈세낭비 우려가 크다.

연수보고서는 “연수가 설계의 지본 지향목표 및 건립의 필요성, 학습효과를 한층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형식적인 결연으로 실질적 효과와는 거리가 멀게 느끼지고 있다.

홍타령축제를 위한 터키방문 역시 시 직원 2명과 문화재단 2명 등 4명이 다녀왔지만 귀국보고서 7장 가운데 접목방안은 고작 A4용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접목내용도 10월 서울명동거리에서 24개팀 600명으로 구성된 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으로 결국 이를 위해 터키에 다녀온 꼴이다. 이들 4명은 항공료만 800만원을 사용했다.

앞서 지난 5월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8명과 시 직원 2명은 9박 11일 일정으로 선진 건설 및 환경기반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유럽여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탈리아 라치오주의 리에티시청과 상공회의소를 공식방문키로 했다가 바티칸시국과 올리브농장만 견학하는 등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스위스에도 이들은 스웨이트리트먼트회사와 웨이스트 리사이클링 센터를 공식방문키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7일째야 독일 뮌헨 레이몬드사 폐기물처리업체와 일정에도 없는 아우그스부르크시 클레르베르크 하수처리장을 둘러본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忠淸日報)= 『의무휴업 규제가 풀린 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17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금천점은 매장 앞 인도에 카트와 보관 거치대를 임시 설치해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 배송차량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매장에 바짝 붙어 정차하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좁은 인도가 더욱 협소해져 시민들이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통해 보행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매장 안에 설치해야 하는 카트를 인도에 버젓이 설치해 놓아 보행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건을 팔기 위해 인도나 도로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GS슈퍼마켓 용담점은 법적 주차공간을 막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매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의 일부 주차면을 창고로 전용했다. 통상 출입문 근처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으로 사용된다.

롯데마트 상당점(상당구 용암동)은 소형 화물차를 이용해 인근 지역에 배달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인도를 통해 배달차량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또 보행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횡단보도의 경사면을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

배달 편의를 위해 상품 하차가 용이한 인도에 배달차량을 줄지어 세워 놓기도 했다.

홈플러스 청주점(홍덕구 가경동)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진출입로 앞 도로에 설치돼 있는 차선규제봉은 연속성 없이 일부는 끊겨져 있어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트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아 아찔한 순간이 자주 목격된다.

차선규제봉을 깔아뭉개고 중앙선을 넘거나 잘려져 있는 공간을 통해 마트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한 사고위험성도 높아 경찰의 단속이 절실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형마트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은 이유없이 망가지거나 예리한 도구에 의해 잘리는 경우가 많아 재설치에 따른 혈세 투입으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한 전통시장 상인은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울화

통이 치민다”며 “단속기관이 적극 나서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성토했다.』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아산시의 인사 정보 보안이 허술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하반기 인사가 무원칙한 코드인사라는 비판, 충북 음성군이 생극산단을 조성하면서 주인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사유지를 감정 평가했다는 주장, 대구시의 업무처리가 전반적으로 ‘무능행정’의 표본이라는 대구시 의회의 일방적인비난, 전라북도 자치단체 별 민원수수료 과다 징수 및 시 군 지역 간 수수료 차이 문제,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연중무휴로 불법영업을 한다고 고발하는 내용, 천안시 공무원과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불투명한 성과 문제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모두 비판의 대상인 아산시, 음성군, 청주시, 대구시, 전라북도, 천안시 및 천안시의회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18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0월 5일자 9면 「“박근혜 외사촌 일가 특혜로 수천억 재산”/무소속 박원석 의원 주장」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10월 6일자 15면 「“박근혜 외사촌 일가에 한국민속촌 특혜”/박원석 의원, 국감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대통령 친인척 특혜에 힘입어 수천억원대 재산을 일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자금을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말했다.

1974년 14억1200만원(정부자금 6억8000만원)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한국민속촌은 민간투자주체의 구축과 자금난을 거쳐 1976년 세진레이온에 인수된다. 당시 세진레이온의 사장이 정영삼 씨다.

박 의원은 “정 씨는 전통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 독재정권의 친인척이라는 점 외에는 민속촌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속촌은 1979년 10·26사태 이후 사실상 사유화했다. 민속촌 일부는 고급 골프장인 남부컨트리클럽으로 전환됐다. 골프장을 소유한 업체 대표가 정 씨의 장남 정원석 씨다.

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정부가 지원했던 6억8000만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을 국가가 회수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 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자산은 4529억원에 이른다.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9322억원이다.

박 의원은 “정 씨 일가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탈세 의혹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승계된 기업 중 431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서우수력이 고작 1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종업원도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우수력의 지분 99.63%는 정 씨의 장·차남인 원석·우석 씨가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인수한 후 그 법인을 통해 부동산 및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대표적인 편법증여”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한 뒤, 재산을 수천억 원 대로 증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정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수천억 원 대의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는 10년 전에 이미 자녀(박 후보 조카)들에게 경영권 승계 및 재산 이전까지 모두 끝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낸 보도자료와 국감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민속촌은 1974년 14억1200만원을 들여 정부 국책사업으로 건립됐다. 정부는 예산소요가 커 민간기업인 기흥관광개발(사장 김정웅·당시 한국고미술품협회 회장)이 7억3200만원 투자를 조건으로 운영권을 줬다. 정부는 나머지 6억8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김정웅 사장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을 겪다가 1976년 10월 세진레이온에 매각됐다. 당시 세진레이온 사장이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씨다. 이후 기흥관광개발은 조원관광진흥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한국민속촌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정씨의 장남인 원석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씨는 특히 1979년 10·26 사태 이후 민속촌이 사실상 사유화되면서, 민속촌 일부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했다. 남부컨트리클럽으로 이를 소유한 금보개발의 대표이사 역시 원석씨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지원한 6억8000만원이 지금껏 환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속촌이 사실상 사유화됐지만 정부자금이 회수됐다는 자료

는 찾을 수 없다”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의 정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정씨 일가 7개 기업의 지분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민속촌을 소유한 조원관광진흥의 최대주주인 서우수력은 정씨의 장·차남 원석·우석씨가 지분 99.63%를 소유한 기업이지만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에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대표적인 편법 증여 방법”이라며 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사를 요구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와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한 뒤 재산을 수천억 원 대로 증식했다고 주장하는 무소속 박원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또 정씨 일가의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을 통한 탈세 의혹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민속촌 특혜 인수가 사실인지도 불분명하지만, 당사자인 정영삼씨와 그 가족들에게 탈세 의혹은 법적 제재 가능성 등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도 헤럴드경제와 경향신문은 이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8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2년 10월 15일자 11면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댐·보 일시 대량 방류 별무효과”도 예측」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지난 3월 4대강 공사로 인해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예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러나 5개월 뒤인 지난 8월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나타나자 “수온 때문에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다른 해명을 했다. 정부는 또 4대강 보와 댐의 물을 방류하더라도 녹조현상을 없애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5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은 4대강 유관부처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를 한 ‘제1회 낙동강 수계 댐·보의 연계운영협의회’ 회의록을 14일 공개했다.

지난 3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4대강 유관부서인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6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2011년도 댐·보의 운영현황과 2012년도 낙동강의 수질오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 간부는 “낙동강의 하천환경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플러싱(flushing·댐이나 보의 수문을 열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효과도 기대치가 낮다”며 “낙동강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도록 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보와 댐으로 물길을 막을 경우 녹조현상이나 환경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심각해지자 수질 개선의 한 방법으로 ‘댐 방류량 증대 및 플러싱 추진’을 제시했었다.

장 의원은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등은 녹조 발생과 4대강 사업이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폭염 탓만 해왔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회의록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간부는 또 회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 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4대강 댐·보 공사로 인해 느려진 유속이 녹조현상의 원인이라는 취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하구언까지 체류시간이 최대 168.08일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보 건설 이전 건기 시 체류시간인 18.4일에 비해 수량의 체류시간이 8.94배나 늘어난 결과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류 발생 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류에 있는 보로 조류가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간부는 회의에서 “1월1일부터 수질 예보를 시행 중이지만 달성보는 (이미) 경제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낙동강 수질 악화를 예고했다.

이어 “올해 초 플러싱 조치 시 하류보로 조류가 전이돼 조류 발생 후 플러싱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오·폐수 관리나 일시적인 댐 수문 개방이 낙동강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지난 8월 낙동강 유역 일대에 조류가 발생해 수질예보가 주의단계까지 격상됐다. 또 안동댐 방류에도 불구하고 녹조현상은 2주 가까이 지속됐다.

환경단체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사무처장은 “당시 협의회는 낙동강의 여름 녹조현상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리였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지난 3월 정부 유관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 열린 '제1회 낙동강 수계 댐·보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나온 환경부 간부 등의 발언을 근거로 정부가 4대강 공사로 인해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예견하고서도 지난 8월 녹조현상이 나타나자 "수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문제의 협의회 회의록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환경부 관계자의 해명이나 반론이 나올 법한 사안인데도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위 기사가 나온 뒤 환경부는 "낙동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갈수기에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3월 회의에서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갈수기에 충분한 유량을 확보해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위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19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 〈주문〉

서울경제 2012년 11월 15일자 7면 「김무성 “文·친노 변호사, 신불자 등골 빼먹어”/“채권추심 연장해주면서 부산저축은행서 70억 챙겼다” 주장」 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11월 15일자 7면 「‘野 후보검증’ 安에서 文으로 바꾼 새누리/“신용불량자 등골 빼먹어”」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1월 15일자 6면 「새누리, 安 향하던 검증 칼날 文쪽으로/“법무법인 부산이 저축銀서 수입료 70억 챙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4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노 변호사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 추심기간을 연장 해주면서 수십억원을 챙겼으며 ‘신불자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문 후보와 그의 친노 변호사 친구들은 신용불량자들을 끝없는 빚 독촉의 고난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라며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고 밝혔다.

그는 “문 후보가 재직한 범무법인 부산은 신용불량자 5만명의 채권을 연장해 주기 위해 한명당 14만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국책금융기관인 캠코가 친노 인사들에게 ‘신용불량자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재천 민주당 의원과 최용규 전 의원이 각각 지난 2004~2007년, 2005~2008년 캠코로부터 신용불량자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일을 통해 3억3,000만원, 12억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친노 변호사들은 범무법인 부산과 마찬가지로 2002~2003년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연체채권들의 소멸시효 연장 일감을 대부분 싹쓸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 등으로 일한 변호사 문재인, 그리고 문 후보와 가까운 친노 변호사들이 개입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특혜이자 썩은 변호사들의 돈잔치”라며 “(신용불량자의) 등골을 빼내 경남 양산에 대지 800평 집을 마련하고 땀겨리며 사는 후보에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새누리당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로 검증 타킷을 전환해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4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그의 친노(친노무현) 변호사 친구들은 신용불량자들을 끝없는 빚독촉의 고난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재직 한 법무법인 부산은 신용불량자 5만명의 채권을 연장해주기 위해 한 명당 14만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바로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는 최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관측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표 확정성 면에서 문 후보를 앞서고 지지율도 높다고 판단돼 안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를 펼쳐 왔으나 최근 들어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문 후보 검증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일보)= 『새누리당이 1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모드’에 돌입했다. 그 동안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타격하거나 다소 안 후보 쪽에 무게를 둔 공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문 후보 쪽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부당수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본부장은 “문 후보가 재직 한 법무법인 부산은 신용불량자 5만명의 채권을 연장해주기 위해 한 명당 14만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등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챙겼다”며 “이는 문 후보와 친노(親盧) 변호사 친구들이 신불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문제는 국책금융기관인 캠코가 문 후보뿐 아니라 친노

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며 “친노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부산과 마찬가지로 2002~2003년 카드 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 채권들의 소멸시효 연장 일감을 대부분 싹쓸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7대 의원이었던 2004~2007년 캠코로부터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일감을 받아 3억3,000만원을 챙겼다”며 “최소 백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노무현 정권과 관련 있는 변호사들에게 특별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의혹은 70억원 수임사건으로 한정될 일이 아니다”며 “지난 정권에서 문 후보와 그 측근 세력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문 후보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며 박근혜 후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지율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문 후보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PK(부산·경남)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데 대한 맞불의 성격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는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신용불량자 5만명의 채권을 연장해주기 위해 한 명당 14만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 등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에는 소속 변호사직을 퇴임한 상태였고,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졌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는 요지로 반박했는데도 세 신문은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문 후보 측의 반론을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들은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3년 1월 22일자 6면 「“감사원, 4대강 발표전 관계부처에 ‘반박말라’ 압력전화”/여권 고위관계자 밝혀/”부처 직원들, 압력탓인지/반박회견하라 해도 안해/장관이 직접회견 나선것」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17일)한 뒤 22일 현재까지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반박 차원을 넘어 향후 과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폭탄 발언’까지 나왔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해당 부처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며 “전화 내용의 취지는 ‘부처에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반박논리를 들이대고 하면 앞으로 좋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누군가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누군가에게 ‘압력 전화’를 넣었다는 주장인데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실

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간부든 직원이든 감사원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며 “힘 있는 기관에 잘보여야하는 부담도 있고, 승진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처에서 일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야 할 터인데 압력 전화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감사원 발표 하루 뒤인 18일 오전 권도엽 국토해양·유영숙 환경장관이 직접 나서 감사원 지적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된 막전막후 상황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기 말 상황이라는 시점 요인도 있겠지만, 해당 부처 직원들이 감사원의 전화를 받은 때 문인지 위에서 정책내용으로 반박 회견을 하라고 해도 밑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결국 그날 아침 장관 2명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은 전 부처를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없고, 국회의 견제기능만 있을 뿐”이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압력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감사원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애써 숨기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알려졌을 때 내부적으로는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시민단체나 그런 곳에서 하는 주장이라면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발표주체가 감사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합동 브리핑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것을 1시간 전쯤인가 알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가 지난주 목요일(17일)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 내에서는 자세한 해명 발표 시점을 월요일(21일)쯤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도 그렇지만,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한다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감사원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해당 부처에 ‘반박논리를 내세우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작성한 것이다.

만약 위 보도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모든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자세 역시 철저하게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한 감사원이 자기 업무내용을 발표하면서 다른 부처에 반박하지 말라고 미리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 수칙에 어긋날 뿐 더러 감사원의 발표내용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기자는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가 아닌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들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욱이 위 기사에 따르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감사원이 관련 부처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취재대상 공무원들은 아무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런데도 기자는 감사원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들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일에 대해 비판대상이자 직접 이해당사자인 감사원에게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는 제작태도는 올바른 보도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보도 명시원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3년 1월 10일자 1, 2면 「현대가 '몽(夢)트리오'의 시대착오/  
▶ 정몽규-몽준-몽원 회장, 체육단체장 선거 뛰어들어/체육계가 '현대 계열사  
인가?' 논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체육단체장 선거로 스포츠관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달 중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선거에 이어 2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현대가(家)의 행보에 물음표가 달렸다. 마치 스포츠가 현대가의 계열사인 듯 '내가 아니면 안된다' 식의 소유욕에 갇힌 형국이다.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간 예산이 1000억원으로 대한체육회와 맞먹는 '공룡단체' 대한축구협회는 현대가에서 또 다른 4년을 노리고 있다. 정몽준 명예회장(62·MJ)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1)이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와 함께 프로축구연맹 총재에서 물러난 정몽규 회장은 MJ의 사촌동생이다. MJ가 축구협회 수장에 오른 것은 1993년, 16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다 2009년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십수년간 보좌한 조중연 회장에게 '축구 대권'을 넘겨줬다. 조 회장은 MJ의 영향력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려졌다. 결국 MJ는 무려 20년간 축구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정몽규 회장의 출마로 '현대가 세습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전후해 외적 성장은 괄목할 만했다. 1993년 당시 축구협회의 연간 예산은 약 65억원에 불과했다. 1000억원 시대가 열렸다. 자립 경영이 가능해졌다. MJ 시절 이룩한 업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엇갈린다. 한 협회관계자는 MJ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을 통

해 인력은 파견했지만 사재를 출연한 적은 없다고 전하고 있다.

실정도 붓물 터지듯 쏟아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였다. 조광래 A대표팀 감독의 밀실 경질,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 담당 직원에게 거액의 특별위로금(약 1억5000만원) 지불,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한 저 자세 외교 등으로 온 국민의 원성을 샀다. 씨앗을 뿌린 현대가에 책임이 있다.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첫 번째 덕목이다. 어느 조직보다 깨끗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냉혹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비리 직원에게 왜 특별위로금을 지불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다. 그러나 브레이크는 없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28일 열린다.

MJ는 다음달에 있을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 나설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이 뿐이 아니다. 현대가는 또 다른 단체의 수장 자리에 도전장을 냈다. MJ의 사촌동생인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57)이 9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본선 진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의원들에게 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기업가가 나서야 하는 명분도 떨어진다. 아이스하키협회는 서울목동아이스링크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적으로 탄탄한 편이다. 아이스하키협회는 서울목동 아이스링크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적으로 탄탄한 편이다. 대표팀 성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남자의 경우 지난해 세계아이스하키주니어선수권대회 디비전2 우승,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디비전1 그룹B 우승을 차지했다. 디비전1 그룹A 승격을 일궈냈다.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B에서 3위를 차지했다. 남자대표팀은 지난해 11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예선에서 아쉽게 최종예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평가는 달랐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한국은 더 이상 쉬운 상대가 아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비록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한 최종예선 진출이 무산됐지만 한국 아이스하키는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 자국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전망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체육계에선 정몽준-정몽규-정몽원 패밀리의 등장에 ‘몽 트리오의 도전’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 수장과 재벌의 동거, 과연 2013년의 시대 정신일까.』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사촌관계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회장이 각각 1월 하순에 치러진 대한축구협회장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데 대해 비슷한 분량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스포츠조선은 여기에서 이들과 사촌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전하며 이들 사촌형제 3명을 겨냥해 「현대가 ‘몽(夢)트리오’의 시대착오」, 「체육계가 ‘현대 계열사인가?’ 논란」이라는 힐난조 표현으로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달았다.

1월 28일 대의원 24명의 투표로 결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회장등 4명이 출마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는 정몽원 회장과 박갑철 현직 회장의 맞대결로 1월 25일에 치러졌다.

기사는 대한축구협회가 20년 남짓 ‘정몽준 체제’로 운영된데다 근자에는 몇 가지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정몽준 명예회장의 지원을 받는 정몽규 회장이 출마한 것은 ‘현대가 세습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몽원 회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편인데다 대표팀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높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가가 나서야 하는 명분도 떨어진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두 사람 모두 대의원들의 투표로 치러지는 경선에 나선 후보라는 점에서, 이들을 비난하려면 다른 후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명이나 반론을 충분히 게재했어야 마땅한데도 기사에는 그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몽규 회장이 2011년부터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아왔고, 정몽원 회장이 20년 동안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을 키워왔다는 등 해당 종목과 인연을 맺어 온 사실을 다른 신문은 소개했지만 위 기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몽원 회장이 기업가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도 지난 해 기준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58개 연맹 중 47%인 27개 종목 회장을 기업인이 맡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정몽준 명예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아무런 의시표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하마평에 올랐다는 사실 만을 놓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

특히 같은 현대가 출신으로 1월 25일 치러진 대한양궁협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 부회장은 부친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2년 동안 맡았던 대한양궁협회장에 2005년 취임했으며, 이번으로 세 번째 연임 도전이다.

게다가 『기업가가 나서야 하는 명분도 떨어진다』면서 아이스하키협회가 기업가 출신 회장이 아니어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조선일보 체육기자 출신이며 이번에 회장 연임에 도전하는 박갑철 현 회장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이기적 동기에 맞춰 작성된 불공정한 기사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kpec.or.kr](http://www.ikpec.or.kr)) 참조〉

## 5. 보도자료의 검증

### ▲ 2012-106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 <주 문>

東亞日報 2012년 3월 26일자 C4면 「개성적 외관+매끄러운 가속능력/40년의 한국 인연 이어간다/시승기 폴크스바겐 ‘시로코」 기사와 제목, 머니투데이 3월 31일자 14면 「獨 디젤차같은 정숙함에 경쾌한 가속감까지/시승기 올 뉴 인피니티 FX30d」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4월 10일자 B7면 「작지만 강한 엔진/알프스를 단숨에/포르쉐 뉴 박스터」, 「치타처럼 … 매끈하다/올 뉴 인피니티 FX30d」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새로 시장에 나왔거나 화제가 되고 있는 수입차들을 소개하는 기사다. 기사들은 차량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광고카피를 연상케 하는 감성적인 제목과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7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2. 충청타임즈 발행인 박 재 규
3. 忠淸日報 발행인 조 승 남

〈주문〉

충북일보 2012년 4월 2일자 7면 「'팔방미인' 세종 한양수자인이 온다」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4월 2일자 9면 「3박자 갖춘 '꿈의 보금자리'/세종 한양수자인」 제하의 기사, 忠淸日報 4월 6일자 12면 「'무결점' 명품 아파트 청주 입성/두산위브 지웰시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忠淸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북일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된 이유는 좋은 학교 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시설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입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지방의 강남 8학군'으로 부상하는 곳이 바로 세종시다.

이번 학기에 문을 연 4개교를 비롯, 세종시에 들어설 150개 학교는 모두 첨단 시설을 갖춘 '스마트스쿨(SMART School)'로 조성되고 있다.

◇ 광주 성공 이어= 최근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한양이 세종시에서도 교육 여건이 뛰어난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난달 30일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 앞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한양은 1-2 생활권 M7블록과 1-4 생활권 M3블록에서 '한양수자인 에듀시티(Educity)'와 '한양수자인 에듀파크(Edupark)'를 공급한다.(중략)

모델 하우스 내비게이션 주소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6-6'이다.

☎1899-0777.』

(충청타임즈)= 『최근 광주광역시 첨단 2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한양이 지난 30일 세종시 1-2 생활권 M7블록과 1-4 생활권 M3블록에서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에듀파크’ 분양을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중략)

### #스마트스쿨 밀집된 생활권, 교육 환경 탄탄

세종시 시범생활권(1-2, 4, 5생활권)에는 오는 2013년까지 총 9개(유치원 3, 초등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2), 2014년까지 총 11개(유치원 4, 초등학교 4, 중학교 1, 고등학교 2)의 교육시설이 차례로 들어설 계획으로 교육면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 들어서는 학교는 유스쿨(U-School)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스쿨로 구성된다.

특히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에듀파크’가 들어서는 곳은 스마트스쿨이 바로 옆에 조성될 예정으로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에듀파크’ 견본주택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6-6 일원에 있다. <분양 문의 : 1899-0777>』

(忠淸日報)=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결정에 따라 충청권 분양시장에도 봄바람이 부는 가운데 두산건설이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 ‘두산위브지웰시티’를 분양한다.

‘두산위브지웰시티’는 주거와 상업, 교통의 중심에 자리잡은 국내 최고의 단일 복합단지로 청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주민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역의 랜드마크를 완성할 두산위브지웰시티는 오는 6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12일 특별공급, 13일 1, 2순위, 16일부터 3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위브지웰시티’는 지하 3층, 지상 45층의 8개동 1956가구 규모로 2015년 완공 예정이며, 분양성이 양호한 전용

80m<sup>2</sup>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중략)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올해 첫 물량으로 주거, 상업 및 공공기능이 결합된 청주 최고의 복합단지 내 두산위브지웰시티를 분양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향후 개발 호재가 많음에 따라 수요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특정 아파트 분양을 알리면서 제목에 ‘팔방미인’ ‘꿈의 보금자리’ ‘무결점 명품 아파트’ 등 감성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고, 본문 중에는 ‘지방의 강남 8학군’ ‘국내 최고의 단일 복합단지’ 등 장점 일색으로 소개한 데다 관측용 메시지를 과다하게 노출하였다.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장기적으로 대세안정기에 접어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투자수단으로 접근했다가는 리스크가 크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를 감안할 때 투자메리트를 지나치게 강조한 위 기사들은 독자의 선택을 돕는 객관적인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건설사의 분양을 돕기 위한 홍보성 기사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 (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9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3.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 〈주문〉

내일신문 2012년 5월 15일자 16면 「더워 쫓고 몸에 좋은 여름상품 여기 있소!/비타민 풍부한 냉장유통주스·우유 품은 커피믹스로 ‘손길’/위와 간에 편한



여름을 나기위해선 내몸에 맞는 제품 선택은 필수. 무턱대고 마시거나 썼다간 후회하기 일쑤다. 당장 입과 목엔 시원할지 몰라도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난히 무더울 것으로 점쳐지는 올 여름, 무엇보다 내게 꼭 맞는 여름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냉장유통주스의 대표주자인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콜드’는 시원함에 건강까지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딱이다.

주스를 낮은 온도로 용기에 담아 콜드체인시스템을 이용해 운송하고 냉장 판매함으로써 비타민 증 영양분 파괴없이 천연과실의 신선한 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첨단 ‘테트라탑’ 용기는 6겹의 특수 재질을 사용해 공기, 자외선 등으로부터 주스가 노출되는 것까지 막아줘 건강주스로 손색이 없다. ‘델몬트 콜드’는 오렌지, 포도, 사과, 제주감귤 등 4가지 과일로 구성돼 입맛에 따라 고를수도 있다.

롯데칠성은 또 지난달 23일 선보인 ‘델몬트 콜드 비타민 플러스’의 경우 무균 환경에서 멸균 페트에 음료를 담은 무균충전(어셉틱)시스템으로 생산 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 욕구를 반영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산 멀티 비타민(비타민CB5 B6 E)과 식이섬유 등을 첨가했다. ‘델몬트 콜드 비타민 플러스’는 오렌지100과 포도100 등 2종. ‘델몬트 콜드 비타민 플러스’ 오렌지100은 비타민C, 비타민B5, 비타민B6, 비타민E가 풍부하다. 1회 제공량 210ml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의 30%를 충족시킬 정도다.

커피업계도 웰빙바람이 거세다. 후식이나 간식뿐 아니라 한여름 졸음을 쫓는데 제격인 달콤 씹싸름한 커피가 몸에도 좋다면 금상첨화인 탓이다.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카페믹스’가 그렇다. ‘프렌치카페카페믹스’는 ‘우유 넣은 커피믹스’ 라는 새시장을 개척한 제품. ‘프렌치카페카페믹스’ 는 2010년 12월 시장에 첫선을 보인지 14개월 만에 대형마트 기준 22.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프렌치카페카페믹스’가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2년여에 걸친 소비자 조사를 통해 크리머의 개선을 원하는 소비자 니드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크리머에 들어가는 7%의 식품 첨가물 중 가장 많은 양인 3%를 차지하고 있던 ‘카제이나트륨’을 진짜 우유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고 1년여가 넘는 긴 시간동안 배합 비율을 mg 단위로 바꾸는 수 천 번의 실험을 통해 카제인 첨가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짜 무지방우유가 들어간 크리머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커피믹스가 맛과 휴대성, 간편성 뿐만 아니라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는 등 품질도 세계 커피 전문가들로부터 인정 받은만큼 ‘커피 문화’로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건강기능 식품으로 첫손에 꼽히는 발효유 역시 여름철을 맞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매일유업이 지난 3월 선보인 ‘위 편한 구트’ ‘간 편한 구트’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매일유업의 대표적인 기능 발효유 ‘구트’를 리뉴얼한 제품이다. 시장에 나오자마자 ‘위와 간을 위한 스마트6 건강관리시스템’으로 눈길을 끌었다. ‘위편한 구트’에는 헬리코박터균으로부터 안전한 특허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유산균(L.acidophilus MK-07)을 포함한 기능성 유산균 3종과 기능성분 3종(브로콜리 새싹분말 크랜베리추출물 녹차추출물)이 포함돼 있다. ‘간편한 구트’에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 활성이 우수한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유산균(Lacto bacillus plantarum HD02) 등 기능성 유산균 3종과 기능성분 3종(미배아대두추출물 베타인 복합비타민)이 들어있다. 여름철 지치기 쉬운 위와 간을 보호할 기능식품으로 제격인 셈이다.

위기정 매일유업 과장은 “이제 발효유는 누군가 배달해주니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제품의 성분을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 마셔야 하는 제품이 됐다”고 말했다.

여름철 여성들의 적은 무더위와 자외선. 피약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간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기 일쑤다.

아모레퍼시픽 라네즈는 여성들의 이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준다. 우선 라네즈 트러블 릴리프 토너는 피부 표면 각질 제거는 물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유해 인자들을 깨끗히 제거한다. 번들거림까지 없애준다. 여기에 라

네즈 트러블 릴리프 크림은 피부 수분보호막을 만들어 주고 피부건조증 등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수분 보습제 역할을 한다. 이들 제품만 갖고 있다면 무더위에도 외출이 두렵지 않다.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의 또다른 여성외출 편의화장품 ‘아이오페 에어큐션 선블록’은 수시로 덧바를 수 있어 인기다. 미백에 시원함은 물론 자외선차단에 메이크업까지도 가능한 멀티 화장품이다. 바르는 게 부담스럽다면 스프레이 타입 자외선 차단제 해피바스 쿨링 선스프레이를 권할만하다.따가운 햇볕마저 즐길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다.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엔 마몽드 리프레싱 오이팩이 제격이다.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을 더해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알갱이는 자극 없이 각질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다.』

(스포츠조선)= 『롯데칠성의 비타민 음료가 프리미엄 퀄리티를 강조하고 있다. 롯데칠성의 ‘데일리C 비타민워터’는 비타민C와 필수 비타민을 물처럼 매일 가까이 두고 즐긴다는 것이 컨셉트다. 비타민 음료의 핵심은 비타민C. 롯데칠성은 ‘퀄리C(Quali-C)’ 인증을 받은 100% 영국산 비타민C를 사용하고 있다. 비타민C 외에 다른 비타민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산 고가 비타민만을 사용한다.

데일리C 비타민워터는 바이탈V, 이글 아이, 스킨 글로우, 마인드 요가, 카테킨 핏 등 5종이 있다. 데일리C 아미노워터는 아미노산음료다.

‘바이탈V’는 비타민C 1000mg과 기타 비타민을 함유한 복합비타민 음료다. ‘이글 아이’는 블루베리와 기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블루베리에 다량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은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스킨 글로우’에는 비타민 및 히알루론산, 콜라겐이 들어있다.

올해 새로 출시된 2종의 제품 중 ‘카테킨 핏’은 다이어트에 유용한 음료다. 비타민A, B5, B6, B12, C, 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L-카르니틴과, 차카테킨을 함유하고 있다. ‘마인드 요가’는 정신 안정이 제품 테마다. 비타민A, 비타민 B2, B5, B6, B12, C, 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평정심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기능성 원료인 라벤더, 캐모마일 허브를

포함하고 있다.

데일리C 아미노워터는 BCAA등 필수 아미노산 8종을 함유해 야외활동에 적격이다.

롯데칠성은 '데일리C 비타민워터'는 유럽산 고급 비타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옥외광고물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지면 광고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강승현, 이현이, 한혜진 등 동양 최고 모델의 워킹을 컨셉트로 한 TV광고도 선보였다. 광고 속 모델들의 의상 또한 데일리C 비타민워터 패키지의 V자 디자인을 활용했다.

업계에선 비타민 음료 주 수요층을 젊은 이들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대학교와 강남역, 가로수길, 압구정, 홍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중심 지역에 인지도 강화 노력을 쏟고 있다. 휴가철에는 휴가지, 대학축제 기간에는 대학가, 패션쇼 현장 등 주요 타깃에 맞춤형 로드 이벤트와 샘플링 행사를 열고 있다. 이밖에 온라인상에서도 블로그와 브랜드사이트를 통한 댓글 이벤트, 7자 토크와 소셜커머스 판매 등 활발한 활동을 더하고 있다.

한편, '퀄리C(Quali-C)'란 다국적 기업 DSM사의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로 '고품질 비타민C(Quality Vitamin C)'를 의미한다. 중국을 제외한 유일한 비타민C 생산지인 영국DSM사 달라이 공장은 유럽의 품질 기준인 GMP, HACCP, CEP, ISO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장이다. 이러한 품질기준으로 생산된 비타민C에만 '퀄리C(Quali-C)' 인증이 부여된다. 롯데칠성은 '퀄리C(Quali-C)'로 고를 독점사용 중이다.』

(일간스포츠)= 『생맥주 펌(Pub) '비어톡'이 맥주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비어톡은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키움라인에서 20~30대의 젊은 손님을 타깃으로 만든 생맥주 프랜차이즈로 9000원의 금액으로 생맥주를 무제한 마실 수 있어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애주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비어톡은 맥주의 시원함을 즐기려는 20~30대 여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다. 맥주가 맛있기 때문이다.

비어톡의 생맥주가 맛있는 첫번째 비결은 냉각 테이블에 있다. 시간이 흘러도 생맥주 온도를 4~5℃로 유지시켜 줘 맥주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 냉각 테이블은 기존의 생맥주집에 있는 냉각 테이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전의 냉각 테이블은 펜(Fan)을 돌려 열기를 빼내며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펜 타입 냉각 테이블은 밖으로 열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열이 있고, 전기 소모가 컸다. 그러나 비어톡의 냉각 테이블은 냉동기 등에 사용되는 열전소자 반도체가 사용해 열효율성이 높고 전력 소모가 적어 전기료 부담이 적을 뿐더러 생맥주를 늘 일정한 온도로 냉각 시킬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생맥주의 특소는 맛을 결정하는 탄산가스에도 신경을 썼다. 임현수 키움라인 이사는 “맥주집에 가면 손님들이 3000cc를 많이 시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탄산이 줄어들고 온도가 올라가 맥주를 계속 맛있게 즐길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냉각 테이블 장치를 고안해 본사에서 직접 만들었다”며 “손님이 무제한으로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되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냉각 테이블이 비싸 쉽게 창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테이블 당 한 달 전기료가 2000원대에 불과하고 고장이 날 경우에는 본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지원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산은 중앙공급 장치를 통해 각 테이블로 일정한 압력으로 전달된다. 또 밀폐 피쳐 용기로 맥주에서 김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 코크가 장착된 피쳐용기가 각 테이블마다 있으며, 여기에도 탄산이 지속적으로 충전된다. 즉, 생맥주집에서 맥주를 시키면 종업원이 따라주는 탄산과 코크 장치를 소형화 시켜 각 테이블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은 자신의 테이블에서 갓 따른 생맥주를 마실 수 있다.

‘비어톡생 브랜딩 맥주’도 인기다. 브랜딩 맥주는 비어톡이 국산 생맥주와 수입 호가든 밀맥주를 섞어 만든 배합 맥주다. 국내 생맥주맛에 물린 30~40대 손님들이 선호한다.

비어톡의 입소문이 나면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문의가 잦다. 회사 관계

자는 특히 기존의 주점을 운영하다 비어톡으로 브랜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유는 하나다. 키움라인의 ‘동반 성장’의식이 가맹점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이사는 “대다수 주점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전환이어도 무조건 냉장고며 식기 등을 싹 바꾸라고 한다. 그러나 비어톡은 그렇지 않다. 냉각 테이블과 몇몇 집기만으로도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가맹점주와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는 본사의 경영 이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더워 쫓고 몸에 좋은 여름상품 여기 있소!」라는 큰 제목 아래 음료, 커피, 발효유, 여성화장품 등 4개 분야에서 한 가지씩, 특정제품을 장점 위주로 돋보이게 소개했다.

스포츠조선은 롯데칠성의 ‘데일리C 비타민워터’라는 특정제품에 대해 유럽산 고품질 비타민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등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보도했다.

일간스포츠는 ‘비어톡’이라는 생맥주 전문 특정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제품 및 설비 특징과 소비자들의 평가 등을 묶어 긍정 일변도로 크게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19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문〉

全羅日報 2012년 6월 14일자 16면 「탁월한 의술·최상의 의료서비스 ... 세계 도약의 꿈 키운다/어깨·팔꿈치 관절 전문 익산 ‘나은병원’ 개원 4돌」 「이병창 원장 인사말/”의술 통해 세상을 이롭게’ 의세 아래 세계 으뜸 자부심과 최상의 서비스로 모든 의료진 고객에 봉사와 배려 실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탁월한 의술·최상의 의료서비스 ...〉= 『어깨 및 팔꿈치 관절 전문병원인 ‘나은 병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았다.

고작 개원 4주년에 불과하지만 어깨와 팔꿈치에 관련한 ‘명품병원’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지방(익산)에 위치한 병원인데도 수도권은 물론 충청, 경상 등 전국 각지에서 관절 환자들이 몰려와 수술예약을 받기까지는 통상 한 두 달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예약 대기자 명단에 외국인들까지 포함돼 있을 정도니 가히 유명세를 짐작할 만하다.

‘나은병원’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관절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은 이병창 원장의 탁월한 의술에다 최상의 의료서비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도약을 꿈꾸는 ‘나은병원’을 소개한다.(중략)

‘나은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 ‘착한 병원’으로서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봉사와 배려를 통해 주변과 동화하고, 재능 기부를 생활화 하자”는 게 이

병창 원장의 이웃사랑 지론이다.

유니세프에서 주관하는 국제연합 아동기금 후원에 동참하는 등 결식아동 돕기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스포츠 의학에 관심이 많아 운동선수들을 진료한 것이 계기가 돼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유도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대한 견주관절학회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것을 비롯 각종 의료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에 대한 후원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칭송이 자자하다.(후략)』

〈이병창 원장 인사말〉= 『개원전 원광대 의대교수로서 진료와 연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최고의 어깨관절 전문의사가 되기 위해 피츠버그 의대에서의 교환교수시절 및 세계적 명의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던 다양한 해외연수를 통해 어깨 및 팔꿈치 관절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가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2008년 설립된 ‘나은병원’은 관절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은병원’은 단순히 지역 환자의 진료에 머물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고객이 찾아오는 관절 전문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세계 으뜸의 자부심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어깨 및 관절질환의 ‘명품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원 4돌을 맞은 전북 익산시 소재 특정 병원을 한 개 면 전체를 향해 ‘특집’이라는 지면 제목아래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였다.

문제의 특집은 주 기사와 원장 인사말 등 2건의 기사로 꾸며졌는데, 주 기사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 및 장비 자랑 등 관측용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제목도 「탁월한 의술·최상의 의료서비스 ... 세계 도약의 꿈 키운다」라는 홍보성 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원장 인사말도 원장 개인의 소신, 포부, 자랑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보도

기사라기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38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머니투데이 2012년 7월 2일자 19면 「“대선<대선주조>의 해” 돌아온 술대표의 출사표/‘작년 경영복귀’ 조용학 대표」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삼방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선주조 기장공장의 소주 생산 설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시설을 갖췄다. 공장은 10만 980㎡ 부지에 연면적 2만 1780㎡ 규모로, 분당 12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에서 생산된 소주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등 10개국에 수출한다.

대선주조를 이끌고 있는 조용학 대표는 지난해 4월 대선주조가 부산 향토기업 비엔 그룹에 인수된 뒤 구원투수로 영입됐다. 순전히 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재도전한 일이다. 그는 1974년 대선주조 연구원으로 입사해 전무이사과 대표이사를 지내고 2007년 퇴임했다 4년 만인 지난해 경영에 복귀했다.

대선주조 ‘시원소주’에 국내 최초로 아스파라긴산을 첨가해 숙취를 획기적으로 없앤 주역으로, 이른바 ‘술박사’로 불리는 조 대표는 “창사 이래 80년을 ‘가장 깨끗한 소주’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쏟아왔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앞

으로 부산의 소주 자존심 되찾겠다”고 밝혔다.

대선주조의 술맛이 좋은 건 그 기본이 되는 물 때문이다. 우선 물은 물 맑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장군 삼방산 지하 100m 천연 암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다. 소주의 80%가 물로 이뤄져 있는 만큼 물에 정성을 많이 쏟고 있다. 특히 5번의 수질처리를 통해 깨끗하면서도 최적의 상태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술맛은 자연스레 좋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시된 ‘즐거워에’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다. 조용학 사장은 그 비결에 대해 “가장 비싼 당류인 천연 식물성 원료 ‘토마틴’으로 쓴맛은 줄이고 부드러움을 살렸다”면서 “여기에 체지방 감소와 간 보호기능이 있는 BCAA와 숙취 해소 효과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을 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법 하나는 사흘 이상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데 있다. 대선주조는 물과 알코올 분자 간의 결합력 향상 위한 연구를 오랜 기간 거듭한 결과 음향진동숙성기법을 개발, 특허를 받아냈다. 이 공법은 소주 숙성 탱크에 음향장치(트랜스 듀서)를 부착해 72시간 이상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데, 이때 발생하는 음향진동이 물과 알코올 분자간의 결합력을 증가시켜 부드럽고 순한 소주 맛을 만들어 낸다.

이와 함께 초미세 거품인 나노버블을 제조과정에 주입해 용존산소량을 증가시켜 소주의 알싸한 맛을 유지하고 목 넘김은 더욱 부드럽게 구현했다.

조 대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완제품 검사기(FBI), 병의 균열이나 이물질을 검사하는 공병검사기(EBI), 에어샤워 등 최첨단 위생시설을 갖추고 깨끗한 소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술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도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부산 지역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 조용학

대표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 대선주조 상품을 장점 일색으로 돋보이게 소개했다.

머니투데이는 「“대선<대선주조>의 해” 돌아온 술대표의 출사표」라고 광고 카피를 연상시키는 제목에다 조 대표의 상반신 큰 사진을 곁들여 조 대표의 경력과 각오를 기사 앞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복귀한 지 1년이 지난 조 대표를 왜 새롭게 기사화했는지, 왜 이 시점에 대선주조가 기사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독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별다른 계기도 없이 대선주조의 술맛과 제조 기법 등을 긍정 일변도로 소개한 배경도 궁금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특정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소지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87 신문윤리강령 위반

####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 〈주문〉

머니투데이 2013년 3월 9일자 12면 「시승기/날렵한 디자인에 경쾌한 질주 ... 누가 왜건이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머니투데이가 자동차면에 게재한 위 기사는 ‘BMW 320 투어링 M스포르츠카 패키지’를 소개한 기사다. 기사는 이 자동차의 단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디자인과 색깔, 성능, 연비, 실내 공간, 주행 안정성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칭찬 일색으로 기술되어 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출시된 이래 판매량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사

람들의 세단 지향성이 좀처럼 바뀌지 않은' 탓으로만 분석하고 다른 이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사는 정보 제공자의 이익을 돕기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독자들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 참조〉

## 6. 피의사실의 보도

### ▲ 2012-1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 〈주 문〉

한국경제 2012년 4월 20일자 A27면 「2년간 14억 뜯어내고 ... 마약 투약 묵인하고 ... /女총경은 名品·귀금속 받아 ... 경찰 '막장 비리'/'룸살롱 황제' 사건에만 경찰관 10명 구속·체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찰의 비위가 도를 넘었다. '강남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 씨(40·구속)에게서 간부급들이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게 잇따라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현직 경찰들이 유홍업소 단속정보를 넘기고 14억원을 뜯어낸 정황이 포착됐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 초기 부실한 대응으로 수사역량을 의심받은 데 이어 도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로부터 여성 총경급 중 한 명이 루이비통과 샤넬, 프라다 등의 고가 가방과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총경이 이씨로부터 고급 가방과 귀금속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A총경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 동료 경찰관 두 명과 함께 구속된 박모 경사(48)로부터 “2006~2008년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현 논현1·2파출소) 2팀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룬살롱 등 유홍업소 30여곳에서 매달 1500여만원을 받아 경찰들에게 월 50만~150만원씩 나눠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사는 “당시 논현지구대에 4개 팀이 있었는데 유홍업소에서 받은 월 상납액은 6000여만원 수준이었다”며 “팀당 14~18명씩 70여명이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2년 동안 14억4000여만원을 받은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중)는 이런 식으로 ‘뒷돈’을 받고 유홍업소 단속정보를 흘려온 B경사 등 현직 경찰관 3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최근 B경사 등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2007~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이씨에게서 40회에 걸쳐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모 경위(43) 등 현직 경찰관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논현동 한 유홍주점 앞에서 매월 한 차례 또는 명절을 전후해서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 경사를 포함, 이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강남경찰서와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경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지금까지 모두 10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승진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고위급 경

찰들도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베이징 주재관이었던 박모 경무관(50·경찰대1기)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장(총경)이었던 2006년 11월 모 반도체 업체 대표인 김모씨(42)로부터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9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2600만원을 받아 최근 구속 기소됐다.

국회경비대장인 홍모 총경(48)은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그는 2007~2008년 경북경찰청 재직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모씨에게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저축은행 관련 수사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를 통해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속보를 전하고 있다. 위 기사에서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중 ‘여성 총경급 한 명’도 등장한다.

한 경찰 관계자가 “여성인 A총경이 룸살롱 황제라는 이경백씨로부터 루이비통과 샤넬, 프라다 등의 고가 가방과 귀금속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A총경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위 기사는 전했다.

결국 위 기사에 따르면 A총경의 금품비리 혐의는 아직 구체성 없이 ‘과다한 소문’에 불과한 수준이며 검찰이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의 총경급 이상 여성 경찰관은 모두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같은 보도는 읽는 이로 하여금 이들 각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들 수 있으며, 또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 근무지 등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면 그 중 한두 명을 특정할 수도 있게 한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아직 구체적 사실과 근거가 부정확해 범죄 혐의가 부

죽한 여총경 관련 비리 혐의에 관한 소문을 기사화하고 더욱이 제목에서는 이를 단정까지 하여 대서특필했는데 이는 이들 여총경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피의사실의 보도),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15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 〈주문〉

한국일보 2012년 9월 1일자 8면 「정명훈 친형 정명근, 보조금 수십억 횡령 혐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친형 정명근(70)씨가 인천시 등에서 받은 수십억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지난 27일 공연기획사 CMI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정씨가 인천에서 벌인 ‘인천 앤 아츠’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시 보조금 정산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기초예술진흥과 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인천 앤 아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7년간 보조금 92억원을 지원했

고, NSIC측은 2005~2008년 4년간 50억원을 후원했다.

정씨는 이 사업을 기획·운영하면서 예술고문료, 기획료 등을 하청업체에 준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씨와 CMI가 송도6·8공구 매립지에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에도 참여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휘자 정명훈 씨의 친형 정명근 씨가 인천시 등의 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 검찰이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며 검찰이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를 하는 단계도 아니다. 기자가 검찰을 취재한 결과다.

이럴 경우, 기자는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 반드시 당사자인 정씨에게 반론권, 즉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의 답변을 게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정씨의 횡령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정씨에게 답변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기사를 보면 정명근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지휘자 정명훈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기사에서 정명훈 씨의 형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정명훈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④(답변의 기회) ⑥(피의사실의 보도),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7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중앙일보 2013년 1월 24일자 12면 「우유주사<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배우 이승연 이번주 소환/검찰 장미인애는 어제 조사/1~2명 추가로 물증 확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유주사 상습 투약 혐의**  
(프로포폴)  
**배우 이승연 이번주 소환**

검찰, 장미인애는 어제 조사  
1~2명 추가로 물증 확보



이승연



장미인애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화배우 장미인애(29)씨를 23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텔런트 이승연(45)씨도 이번 주 내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장씨와 이씨를 포함해 여성 연예인 3~4명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특별한 시술 없이 투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성형외과 등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장부 등을 정밀 분석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고

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와 이씨가 병원을 상습적으로 찾아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맞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장씨 등이 2~3개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장씨는 2003년 모 방송사의 청춘시트콤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이씨는 최근 한 케이블 채널에서 ‘동인’ 외모관리법을 알리며 화제가 됐다. 검찰은 장씨와 이씨에 이어 방송인 이씨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세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중앙일보 2013년 1월 24일자 12면〉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화배우 장미인애(29)씨를 23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텔런트 이승연(45)씨도 이번 주 내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장씨와 이씨를 포함해 여성 연예인 3~4명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특별한 시술 없이 투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성형외과 등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장부 등을 정밀 분석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와 이씨가 병원을 상습적으로 찾아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맞고 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장씨 등이 2~3개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장씨는 2003년 모 방송사의 청춘시트콤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이씨는 최근 한 케이블 채널에서 ‘동안’ 외모관리법을 알리며 화제가 됐다. 검찰은 장씨와 이씨에 이어 방송인 H씨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검찰이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영화배우 장미인에 씨를 지난 1월 23일에 소환해 조사했고 톱 탤런트 이승연 씨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두 사람의 얼굴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연예인들을 수사 중이라는 기사는 수사 대상자를 익명으로 표기해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실명을 공개하기는 중앙일보가 처음이다.

위 기사는 검찰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씨와 이 씨가 병원을 상습적으로 찾아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맞고 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취재기자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두 사람은 그러나 위 기사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나 시술 목적이었지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이들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의 실명 공개 이후 대부분 언론은 두 사람의 프로포폴 관련 수사 속보를 실명으로 내보냈다.

이들이 비록 공인 신분이기 는 하지만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 여성 연예인인데다, 현행범도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없을 만큼 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것도 아니었다면 중앙일보의 실명 공개는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앙일보는 이들이 해명과 반론을 위 기사는 물론 이후 지면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 ⑤(피의사실의 보도),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051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1월 31일자 1면 「임윤택 前서울시태권도협회장 배임·횡령혐의 수사/검찰 “비리의혹 간부들도 포함”」, 13면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 왜 끊이지 않나/회장이 유사단체 회장까지 겸임/친인척 채용·배임등 잡음 잇따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 『검찰이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임윤택(60) 전 회장과 그 측근 간부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부지검 특수 2부는 서태협의 임 회장과 그 측근들을 직권남용과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임 전 회장 등은 협회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씨는 서태협 회장으로 당선된 지난 2009년 1월부터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며 친인척을 서태협 주요 자리에 앉힌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특히 동서지간인 A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사제지간인 B 씨와 C 씨를 각각 전무이사과 사무처장에 앉히고, 외사촌 조카를 사무국 직원으로, 외사촌은 경리여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씨와 그 측근들은 서울시 생활체육 연합회에 2010년까지 연간 5400만원, 2012년에 18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 경민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 우석대학교, 대학연맹 등에 연간 1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장애인태권도협회 교육비 명목으로 피교육자 700~ 800명으로부터 1인당 12만원의 교육비를 받아 약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13면>=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비리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윤택(60) 전 서태협 회장(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과 간부 3명은 지난 2009년에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1년 예산이 58억원인 서태협에서 이처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서태협 소속 구지회의 모 관계자는 “서태협의 예산 중 구지회 한 곳에 매달 320만원(구지회장 활동비 70만원, 행정정보조비 250만원)이 지급된다. 25개 구지회에 연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48억원으로 협회가 운영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 태권도협회에 비해 유독 서태협의 재정이 엉망인 것은 간부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여러 협회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도 문제도 지적된다. 임

회장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태권도연합회’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태협 예산을 자신들의 단체로 빼돌려 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임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서태협 소속 구지회의 모 관계자는 “명예회장과 상임고문 등 주요 임원 10여명에게 매달 수백만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이 연간 5억원에 달한다”면서 “임 회장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돈을 자신의 뜻대로 조직을 끌어나가기 위해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 이유 중 또 하나는 친인척을 데려다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서태협 사무국 직원 15명 중 6~7명을 친인척으로 채용했다. 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서태협 운영진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의 부인 A 씨는 서태협 소유 업무용 에쿠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보험료, 주유비 등을 서울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서울시에서 제공한 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부인이 타고 다닌 차량의 유지비까지 서울시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임유택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과 측근 간부들이 협회 운영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위 적시 1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회면 박스 기사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헤럴드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위 기사에 따르면 임 전 회장 등은 직권남용과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헤럴드경제는 이들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여 상세히 전했다. 특히 사회면 박스 기사에서는 『임 회장의 부인 A 씨는 서태협 소유 업무용 에쿠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보험료, 주유비 등을 서울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임 전 회장 부인의 부적절한 행태까지도 ‘알려졌다’는 피동형 표현을 곁들여 함께 보

도했다.

보도 관행과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헤럴드경제는 임 전 회장 등의 혐의 내용을 사회면 박스 기사에 거론된 『서태협 소속 구지회의 모 관계자』등을 통해 취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 기사 보도를 전후해 이 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없었고, 만약에 검찰이 위 기사에 나온 혐의 내용을 시시콜콜 알려주었다면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 행위다. 따라서 헤럴드경제는 임 전 회장 등의 부정과 불법 혐의를 미리 취재한 뒤 해당 검찰청의 수사 착수 사실만 확인하고 기사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 단계에서 임 회장 등의 부정과 비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일 뿐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헤럴드경제는 임 전 회장의 부인과 외사촌, 외사촌 조카, 동서, 제자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했다. 비록 실명을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시태권도협회 등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사건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이들에게 억울한 불이익을 주고,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사안의 성격상 임 회장 측이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헤럴드경제는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임 전 회장은 위 기사가 나가고 닷새 후인 2월 5일에 치러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과 함께 출마했는데, 대의원 20명이 투표한 선거에서 임 전 회장은 8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김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위 기사는 임 전 회장의 득표 전략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 ⑤(피의사실의 보도),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